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7호

2026 여름

## 지정학 시대의 부상: 재편되는 세계

포커스 I 고전 지정학과 인도-태평양

포커스 II 21세기 지정학 경쟁

N O R T H E A S T A S I A N H I S T O R Y F O C U S

김영수·이주연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7호 기획편집위원

## 포커스 I

고전 지정학과  
인도-태평양

<b>유동하는 지리와 인도-태평양 지정학</b>	8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초빙교수	
<b>러일전쟁과 지정학</b>	21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b>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b>	31
송병권 상지대학교 지역혁신행정학과 부교수	

## 포커스 II

21세기  
지정학 경쟁

<b>미국의 대외 전략과 세계 지정학의 미래</b>	41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b>21세기 그레이트 게임과 중국의 지정학 전략</b>	50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지정학적 경쟁 시대 ‘끼인 국가’의 선택</b>	61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b>일본의 21세기 지역질서 구상, FOIP</b>	73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러우전쟁 이후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b>	82
풍 치 끼엔 베트남국립대학교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정치학부 정치학 강사	

## 체험! 역사현장

<b>유엔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참관기:</b>	96
<b>식민지 범죄, ‘위안부’ 제도, 그리고 증일 대립</b>	
손성숙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 NAHF 톨아보기

<b>시공간을 좁아웃해야 비로소 보이는 본질:</b>	106
<b>『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토크</b>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한중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b>	116
<b>제2회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b>	
홍문기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b>주체성이라는 난제와 비판성의 행방:</b>	125
<b>제2차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b>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Contents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7** 3  
Kim, Young-Soo & Lee, Ju-yeon

**FOCUS I**  
**Classical**  
**Geopolitics and**  
**the Indo-Pacific**

**The fluid Geography and Indo-Pacific Geopolitics** 8  
Lee, Jinil

**The Russo-Japanese War and Geopolitics** 21  
Kim, Young-So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s an Indo-Pacific Strategy** 31  
Song, Byong-kwon

**FOCUS II**  
**Geopolitical**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of U.S. Foreign Strategy and Global Geopolitics** 41  
Chaesung Chun

**The Great Game of the 21st Century and China's Geopolitical Strategy** 50  
Kim Inhee

**Geostrategic Options for In-between States in an Era of Geopolitical Competition** 61  
Bong-geun JUN

**Japan's 21st-Century Vision for Regional Order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73  
Suk, Juhee

**Geopolitical Strategy for Southeast Asia: The case of Vietnam since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82  
Phung Chi Kien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UN Crimes Against Humanity Preparatory Committee: Confronting Past Atrocities, "Comfort Women" System, and Current China-Japan Debates** 96  
Sung Sohn

**NAHF's Topical**  
**Investigation**

**Zooming Out on Space and Time to Reveal the Essence: Book Talk on The History of *Imperial Sex Management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106  
Park, Jungae

**Historical Perceptions and History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The 2nd Korea-China Forum for Textbook Authors** 116  
Hong, Munki

**The Aporia of Subjectivity and the Fate of Criticality: Reflections from the 2nd Korea-Japan Future Researchers Forum** 125  
Lee, Kyung-mi

## 편집자의 글

이번 호는 ‘지정학 시대의 부상: 재편되는 세계’를 주제로 국내외 지정학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20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서 발생한 러일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패권을 쥐려는 해양세력 영국과 남하하려는 대륙세력 러시아의 거대한 지전략적(地戰略的) 충돌이 투사된 결과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 세계는 비로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결정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근대 고전 지정학이 태동하던 시기, 한반도의 영토와 해양은 이미 열강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 그 운명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호는 이러한 역사적 연원 위에서 고전적 대결 구도가 어떻게 현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결되고 변모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이 결코 분리된 공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유럽의 무기 지원과 북한의 군사 개입 사건은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의 안보가 하나로 동기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러시아를 둘러싼 유라시아의 분쟁은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중동 문제를 완전히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반의 해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구상과 맞물려 있으며, 그 서쪽 끝에서 하나의 전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현대 지정학의 핵심인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대륙과 해양 대결 구도가 현대에는 더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진화하여, 우리의 영토와 해양 주권에 새로운 전략적 응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커스 1」은 ‘고전 지정학과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진일은 세계가 점차 다극화되면서 국제 무대의 주요 공간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이 기존의 동맹을 다지면서 힘의 변화에 따른 지

정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도-태평양의 공간 범위가 베링해와 북극해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수는 러일전쟁을 헬퍼드 매킨더의 ‘심장지대’ 이론과 알프레드 머헨의 ‘해양력’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서 당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패권 경쟁이 오늘날의 유라시아 질서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한다. 그는 러일전쟁의 본질이 해양세력인 영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대립에 있고, 전쟁 이후 세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포츠머스조약이 미국의 중재로 체결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송병권은 과거와 현재 일본의 지역주의 기반 지정학 전략을 설명하면서, 현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표면적인 이상주의적 명분과 다르게, 사실상 해양세력(미국, 일본 등)이 대륙세력(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1950년대 미국의 반공전략인 ‘태평양동맹’의 확장판이자,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지정학 욕망의 산물인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궤를 같이하므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포커스 II」의 주제는 ‘21세기 지정학 경쟁’인데,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21세기 지정학 경쟁의 주요 행위자이자, 지정학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지정학 전략에 관해 서술한 글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지정학 전략을 분석한 전재성은 트럼프 정부가 ‘지역별로 분리된 지정학 전략’을 선택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지 않고,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전략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란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패권이 약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 상황 속에서 다자 협력을 주도하고 지역질서의 공백을 채우는 적극적인 ‘국제질서의 조성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희는 2008년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강대국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보이는 공간의 지정학’(일대일로)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인류운명공동체) 전략을 병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서구권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미래 세계 패권을 위한 지정학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봉근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충돌 단층선에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와 걸프 국가 사례와 같이 강대국 전쟁에 연루되는 ‘끼인 국가’의 비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 독자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핵심축으로 자강 역량 강화, 지역 협력, 남북 공존, 유사국 국제연대 등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외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석주희는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표면적으로 자유주의 가치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평화 국가로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과 헌법 개정 논의, 안보 역할의 확대는 주변국의 우려를 높인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과거에 개인의 그릇된 리더십과 판단으로 벌어진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은 전후 지금까지 지켜온 헌법 9조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풍 치 끼엔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베트남이 자국의 지정학 공간을 아시아-태평양-인도양까지 확장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체험! 역사현장」에는 손성숙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가 유엔 뉴욕본부에서 개최된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참관기를 작성하여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하였다. 그는 1월 회의 첫날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중일 양국 간의 토론과 그 배경 및 시사점을 다뤘다. 또한 반인도범죄독립협약의 개요와 역사, 그리고 더욱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책임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명하였다.

「NAHF 토크아보기」에는 세 건의 재단 행사를 조명하였다. 박정애는 최근 발간한 연구총서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토크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북토크에서 ‘위안부’ 담론의 한계와 장애물,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누가 덜 나쁜 국가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나 국가폭력 자

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별 구조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변 여성의 이야기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시 쓸 때, 비로소 ‘보편적 여성 인권’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홍문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술과 한중 역사인식의 대화’를 주제로 한 제2회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에 대해 소개하였다. 청일전쟁을 다룬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를 교차 검토하면서, 두 국가가 청일전쟁을 둘러싼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민족과 국가 범주에 머물지 않는 역사교육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재단이 마련한 이번 회의는 어려운 과제 해결을 양국 관계자가 서로 인식하고 쟁점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경미는 지난 3월 13일에 개최한 제2차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의 현장 분위기와 그 성과를 전하였다. 지난해 개최한 제1차 포럼이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면, 이번 제2차 포럼은 대화의 깊이와 폭이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하였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_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현재 지정학 시대는 한국에 ‘위험한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처럼 지정학 경쟁에 수동적으로 휩쓸리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자주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격변하는 지정학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히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렛대로 국익을 확대하는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지정학 시대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번 호의 글들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 대안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7호 기획편집위원

김영수·이주연

포커스 I

# 고전 지정학과 인도-태평양

## 유동하는 지리와 인도-태평양 지정학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초빙교수

## 러일전쟁과 지정학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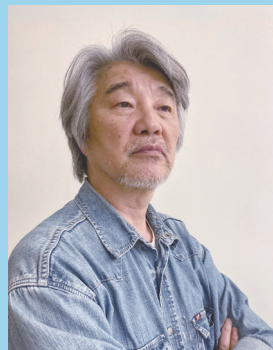
송병권 상지대학교 지역혁신행정학과 부교수

# 유동하는 지리와 인도-태평양 지정학

**이진일(李眞一, Lee, Jinil)**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독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세기 서구 고전 지정학의 전개 및 이를 배경으로 진행된 동서양 간 지정학의 적용과 이의 트랜스내셔널한 학문적 전이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독일사학회 회장과 한독비교사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최근 발표한 글로는 「20세기 전환기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이 있다.



##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난 20세기가 ‘대서양의 시대’였다는 점에는 아마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후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기대했던 ‘역사의 종말’과는 달리 미소 양극 체제는 점차 다극적 세계로 변해왔다. 전후 자신들이 세우고 지배해 왔던 낡은 국제관계의 규칙들을 스스로 내던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가치의 공유가 아닌 철저히 현실정치에 바탕한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때 전 지구를 휩쓸었던 세계화의 물결도 퇴각의 고비를 맞고 있다.

대서양이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의 동안, 아프리카의 서안 등에 둘러싸여 있다면, 인도-태평양은 지구의 나머지 반구, 즉 아프리카 동안과 중동,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서안으로 둘러싸여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국가와 언어, 종교, 종족을 포함하는 거대한 세계다.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연대기나 시대 구분은 없으며, 공통의 지형학적 진화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도양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남쪽의 오스트레일리아에 둘러싸인 독자적인 대양이다. 태평양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거대한 섬과 반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말라카(Malacca)해협이 극적으로 두 대양을 연결해준다. 태평양 또한 남극과 북극 사이를 가로지르며 기후나 해양학적 측면에서 인도양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양 대양에 인접한 국가들의 관심사도 전통적으로 같지 않았다. 인도양 인접 국가들은 주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상선의 안전이나 아프리카 해안 주변의 해적 등 해상 안보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면, 태평양에서는 남중국해의 경계, 대만, 일본의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등 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지배적인 관심사다. 해양에 인접한 국가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주로 발전된 산업을 바탕으로 동서 태평양을 오가며 촘촘한 무역망 속에서 움직이는 반면, 인도양에서는 많은 개발도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출처: [https://map.ngii.go.kr/world\\_renew/mapdownload02.html](https://map.ngii.go.kr/world_renew/mapdownload02.html)

대서양 세계는 19세기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경제적·과학적·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곧 근대성의 기준이었다.

상국들이 원자재 수출과 지역 무역망에 의존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개념의 비판자들은 아프리카 동안에서부터 아메리카 서안까지를 하나의 통일적 단위로 기획하는 것은 제어하기에 전략적으로 너무 큰 규모이며, 자칫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더 넓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본질적인, 혹은 다른 층위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역사가와 역사지리학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양 대양이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상반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이 둘을 하나로 끌어안아 녹이는 특별한 결집 요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는 대서양이나 지중해와 마찬가지로 대륙에 의한 물리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 해양 사이는 난류가 자유롭게 관통하면서 산호초나 어류에서 보듯 생물학적 통일성이 높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면 상승과 해양생물의 감소, 엘니뇨 현상 등 상호 연결된 환경시스템은 양 해양에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서양 세계는 19세기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경제적·과학적·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곧 근대성의 기준이었다. 이에 반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공공롭게도 대부분 서구 제국주의적 팽창 세력에 의해 억압과 지배를 받았다. 대서양 공동체와 달리 인도-태평양 세계에서 유독 서구에 대한 적대적 경향과 강력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인도양과 태평양을 묶는 가장 큰 역할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온다. 2013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양 대양의 해안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주도하는 통일적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도양과 남중국해 연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무역루트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게 페르시아만에서 도쿄까지 전 루트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법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의 자유’라는 보편적 개념이 인도양에서 아라비아해에 적용되고, 태평양에서는 남중국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굳이 양 해양을 분리하는 것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일 개념을 사용함이 양 지역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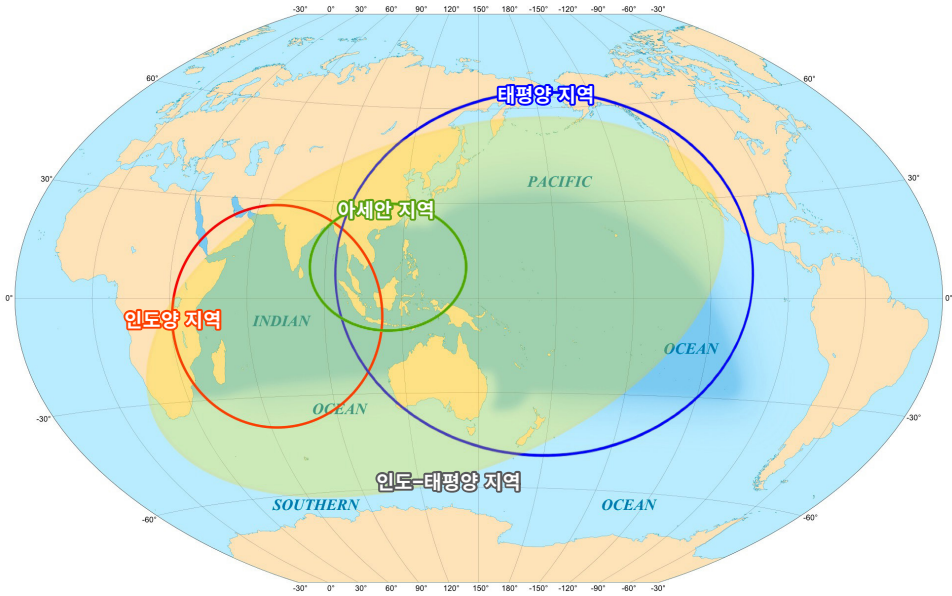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개념에 특정한 지역적 정체성을 부여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전반기 유럽 지리학자들부터였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에 의해 동남아시아사령부(South East Asia Command)가 창설되고, 전후 미국이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갖고 대학과 여러 연구소에서 동남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곳은 하나의 독립된 지역학 단위로 발전하게 된다.

집단 정체성이 문화와 국가 정책, 혈연 관계 등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이들을 한데 묶는 통일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서 프랑스의 역사가 브로델(Fernand Braudel)이 저서 『지중해: 펠리페 II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1』에서 사용해 유명해진 문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중해에는 원래 어떤 통일성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 이것이 가져온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갔던 경로들 덕분에 탄생했다.*

비록 인도-태평양 개념이 현실의 정치적·지리적 차원에서의 경계들과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라카해협을 매개로 이어지는 대양의 연속체로 해석할 수 있다. 양 대양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은 지정학적 구상을 넘어 인



### 인도-태평양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95795701>

도-태평양이라는 거대 서사가 갖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는 대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 고전 지정학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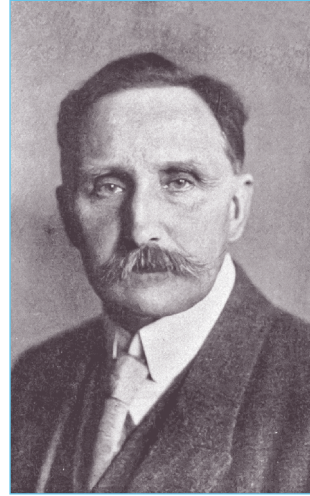
우리가 ‘고전 지정학’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이론이 처음 만들어지는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 종전까지이다. 이들 고전 지정학을 구성한 학자로는 19세기 후반 처음 지리학에 정치적 사고를 결합시킨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riedrich Ratzel), 20세기 초 활동했던 영국의 지리학자 매킨더(Halford Mackinder), 스웨덴의 정치학자 쉘렌(Rudolf Kjellen), 미국의 해군 제독 머헨(Alfred Mahan)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금 이들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 이후 주된 활동을 벌였던 독일의 지리학자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미국의 지리학

자 셴플(Ellen Semple, 라첼의 제자),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스파이크먼(Nicholas Spykman)과 같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 상정했으며, 사회생물학적 이론에서 유추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유기체론적 사고와 이에 바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익 근본주의 사고는 인종과 문명의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많은 경우 이들은 환경결정론적 사고에 바탕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세력이 각축하는 다극적 세계로의 귀환은 오늘날 고전 지정학을 다시금 현실에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정학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인물은 하우스호퍼다. 그는 인도양과 남중국해 주변의 국가들을 ‘몬순 국가들(Monsunländer)’로 표현한다. 이 국가들이 인더스강 어귀부터 아무르강까지 남동아시아 해안을 감싸는 통일적 기후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생존공간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도 문명과 동아시아문명이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면서 세계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제 이들이 역동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한다고 1928년에 지적했다.

하우스호퍼 이전의 지정학자 누구도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통합해 생각하지 못했으며, 냉전이 종식되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두 대양을 하나로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도양에서 영국이 확고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앵글로-색슨 지정학자들이 굳이 양 해양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오랫동안 고전 지정학자들은 이 두 바다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그것이 곧 대서양 중심적 시각이었다. 하우스호퍼가



카를 하우스호퍼  
(Karl Haushofer, 1869~1946)

출처: <https://www.dhm.de/lemo/biografie/karl-haushofer>

인도양에서 영국이 확고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앵글로·색슨 지정학자들이 굳이 양 해양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오랫동안 고전 지정학자들은  
 이 두 바다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그것이 곧 대서양 중심적 시각이었다.

앵글로·색슨 지정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식민지 정복자 입장이 아닌 피식민 국가 입장에서 지정학적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옹호하면서 아시아 피식민 국가들의 독립을 적극 주장했다.

고전 지정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에서 ‘지리적 중심축(pivot)’으로 삼았던 지역은 각기 달랐다. 매킨더가 세계의 추축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러시아(러시아가 무너진다면 중국)를 지적했다면, 머헨은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를 서반구를 위협하는 핵심지역으로, 스파이크먼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태평양이 맞닿아 있는 연안지역(rimland)을 지리적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이에 반해 하우스호퍼는 독일-러시아-일본을 잇는 유라시아의 동서 횡단축을 자신의 지정학 중심에 위치시켰다. 이는 그에 앞섰던 앵글로·색슨 지정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 독일이 러시아, 일본 등 소위 ‘못 가진 나라들’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 블록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그중에서도 ‘문순지역’이라고 부른 남동아시아 연안의 여러 반도 및 섬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심을 보였던 그의 지정학은 반제국주의적이고 평화적이었나?

그렇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 그는 한편으로 앵글로·색슨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저항할 전략에 집중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적 신념, 사회다윈주의에 철저했던 인간이었다(부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의 화려했던 지정학 이론은 궁극적으로 독일 민족의 ‘생존공간(Lebensraum)’을 확대시킬 전략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정학을 통

지리도 권력도 끊임없이 유동한다.  
중심이던 지역이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변방이 지정학적 공간의 역동적 중심에 놓이기도 한다.  
지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 한편으로는 자국의 세력 팽창을 이뤄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소 국가들과의 연대를 주장함으로써 이루지 못할 딜레마 속에 생을 마감했다.

## 유라시아 중심축의 이동과 인도-태평양 지정학

지리도 권력도 끊임없이 유동한다. 중심이던 지역이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변방이 지정학적 공간의 역동적 중심에 놓이기도 한다. 지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리적 공간, 경계, 영토, 권력의 중심을 고정된 대상으로 사유함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 가능한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환경과 인구의 변화, 이민, 무역루트의 변경, 기술과 디지털화에 따른 발전과 함께 지정학적 영향권 또한 변화한다. 오늘날의 지정학은 물리적 영토뿐 아니라 금융과 환경, 사이버 공간, 나아가 우주 공간까지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유연한 경계는 당연히 역내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키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갑작스러운 충돌에 무력하다.

중심이 바뀌면 변방도 바뀐다. 중심만 바라보고 중심으로의 진입만을 목표로 삼을 일도 아니다. 일본이나 미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상정하는 지정학적 중심 또한 각기 다르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게 잡고자 한다면, 미국은 활동 영역을 동아시아에서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로 서진해가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서부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ASEAN은 미중 간의 경쟁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 해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대화를 강조한다. 즉 유동하는 중심은, 지정학이 지도가 보여주는 가시적이고 명확한 경계의 논리에서 벗어나 권력과 공간이 상호 연결되는 다차원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남중국해가 그런 전형적인 예를 제공한다.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사이에는 경계와 영향권이 역사적으로 늘 분명하지 않았고, 무력과 경제적 이해, 혹은 남획에 따른 생물자원의 고갈과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경계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규정되어 왔다. 더욱이 중국이 최근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시설화함으로써 경계들은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 무역루트를 바라는 강대국이 동맹 원칙을 내세워 개입하게 되면 충돌은 쉽게 확대될 것이다.

##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개념이 갖는 전략적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 대양의 결합은 쉽지 않았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결합하고자 하는 일본과 인도의 실질적 교류는 사실상 2003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인도의회에서 행한 아베 신조 수상의 ‘인도-태평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 선언도 2007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대체하며 도쿄의 공식적 지정학 전략으로 확정되었다. 일본 전략 변화의 주된 목표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간 무역과 투자의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미국의 화답도 분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외교의 중심을 인도-태평양으로 움직이는 정책이었다. 2018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와이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

부(US Indo-Pacific Command)로 개칭하고, 이듬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한다. 중국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항해가 자신들의 지정학적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이라는 결합체는, 한편으로는 교역상의 실용적 유용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양 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역내 국가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만들어낸 전략적 소산이다.

EU 또한 인도-태평양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자유롭고 공개된’ 전략공간으로 표현하면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2026년 1월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인도와의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어 지난 3월에는 8년여의 협상 끝에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 체결도 마쳤다. 양자 모두 단순한 통상협정을 넘어 각종 자원의 공급망 안정, 서비스 부문과 금융시장 개방, 안보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중 중심의 무역구도로부터의 탈피’라는 장기적이며 전략적 목표를 향한 시도다. 18세기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250여 년을 이어오던 유럽과 미국 간의 친밀했던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EU는 이제 인도-태평양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공식 인장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지도 중앙에 위치하여 자신들이 지구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DOPACOM\\_Emblem\\_2018.pn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DOPACOM_Emblem_2018.png)

## 전망

하나의 단일하고도 통일적 지역단위로서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도 같은 아대륙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소대륙의 이해가 남중국해나 남태평양 작은 섬들의 이해와 같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

이란과의 전쟁 후과로 미국은 상당 기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지금까지 중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가면을 스스로 던져 버렸다.

해오는 위협(pacing threat)'과 '상호 호혜적 경제관계(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hip)' 사이에서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린 채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그나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했던 여러 남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중심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란과의 전쟁 후과로 미국은 상당 기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지금까지 중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BO: The Rules-Based-Order)'라는 가면을 스스로 던져 버렸다.

다양한 문제 제기과 새로운 모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태평양을 구성해온 문제의 핵심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중국의 세력 확장과 영향력을 지역에서 차단하고 대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도-태평양 지정학 논의의 근본적 배경에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현상 변화를 어떻게 주변국들이 막아내고 대비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에게서 기존의 동맹을 확실히 다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동맹의 설정도 필요하다. 또한 군사동맹의 결성과 같은 적극적 방식에 앞서 인도-태평양 체제의 정치적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공식적 지배구조를 넘어 이 구조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작동시켜온 역사와 권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북극해와 북극항로의 개척이 한반도 해양전략의 미래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다시 한번 유동을 겪고 있다. 부산과 동해는 북극항로

의 허브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가 미일과 북중러를 함께 포괄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각축에서 지리적 핵심지역으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인도-태평양은 베링해와 북극해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가 겪어왔던 전통적 지정학 문법을 넘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일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 시간은 실로 괴물들의 시간이다.<sup>1</sup>*

이 위기의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1 페페 에스코바 지음, 유강은 옮김, 『다극세계가 온다』, 돌베개, 2025.

# 러일전쟁과 지정학

**김영수(金榮洙, Kim Young-Soo)**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및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역사학박사를 받았다. 한국근대사 및 한러관계사를 전공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동해연구실장, 교육연수원 교수, 교양총서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젤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명성황후 최후의 날』, 『제국의 이중성』, 『이희, 러시아 공사관에서 375일』, 『100년 전의 세계일주』, 『울릉도 1882』 등이 있다. 2013년 『문학의 오늘』에 「안톤 체홉의 현장보고서 사할린섬」 등의 문학평론을 발표했다.



러일전쟁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영국·일본의 대립이 투영된 국제적 사건으로, 매킨더의 ‘심장지대’ 이론과 머헨의 ‘해양력’ 개념을 통해 그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지정학자의 시선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당시의 패권 경쟁이 오늘날 유라시아 질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지정학자 매킨더가 바라본 러일전쟁

매킨더(맥킨더, Sir Halford J. Mackinder, 1861~1947)는 지정학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장지대(Heartland, 주축지대)’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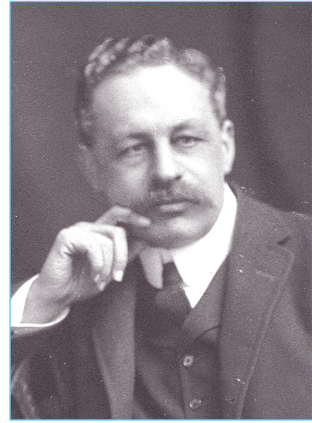
매킨더가 제시한 ‘심장지대’는 유라시아(Euro-Asia)의 북부와 내륙 지역을 뜻한다. 심장지대는 북극해 연안에서 아래로 대륙의 중앙 사막지대를 향하고 있으며, 서쪽의 한계는 발트해와 흑해 사이의 광대한 지협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에는 지구에서 단연 가장 넓은 저지대 평원이 있다. 둘째, 이 평원을 가로질러 항해가 가능한 대하천이 흐른다. 셋째, 목초지대가 있어 낙타와 말을 이용한 유목축이 높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결국 심장지대에 동서로 펼쳐진 하나의 대초원지대는 해상교통과 다른 독자적인 기동력을 제공한다.

매킨더는 심장지대인 유라시아 지역을 주목하면서, 당대 유라시아의 중심이 러시아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유라시아 대륙은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인 2,100만 평방마일 크기로, 즉 전 지구 육지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유라시아는 하나의 연속적 대륙 개념이다. 이 심장지대 주변에는 동부와 남부, 서부 방향으로 선박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반월호형(半月弧型) 지역이 있다.

매킨더는 세계 체제를 대륙세력(주축지역: 러시아)-내부 초승달-해양세력(외부 초승달: 영국·일본)이라는 구도로 설정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인도

매킨더는 세계 체제를 대륙세력(주축지역: 러시아)-  
내부 초승달-해양세력(외부 초승달: 영국·일본)이라는 구도로 설정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인도를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를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과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의 핵심 이론에 따르면, 동유럽을 지배하는 국가가 심장지대를 제어하며, 심장지대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진정한 독립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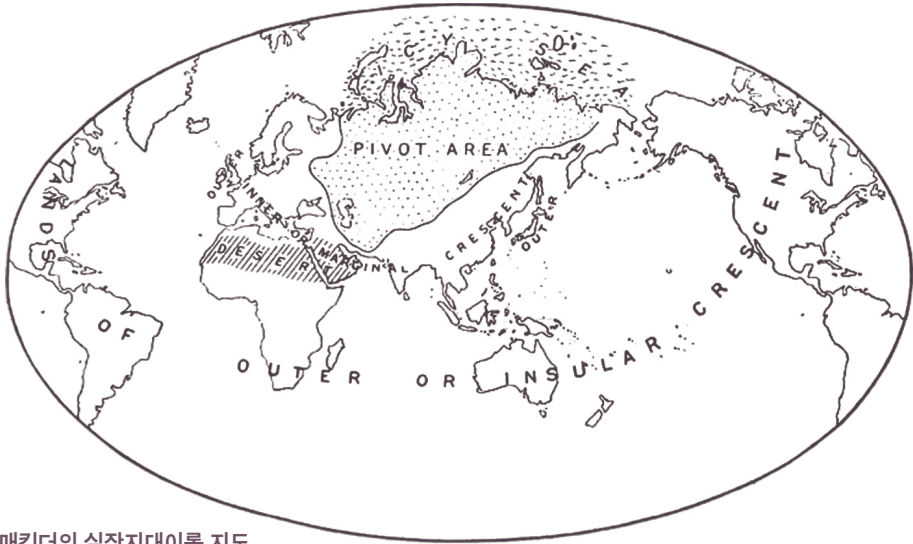


헐퍼드 매킨더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alford\\_Mackinder](https://en.wikipedia.org/wiki/Halford_Mackinder)

매킨더는 영국과 러시아, 독일의 외교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해양세력 영국은 대륙세력 독일과 러시아의 대립을 지지했는데, 독일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지지했다. 독일은 서유럽을 분열시키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유럽을 지배하려는 외교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독일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패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는 이처럼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여 유럽 지역의 대립을 파악했다. 영국과 독일이 지리와 경제, 문화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서유럽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독일과 러시아가 슬라브민족의 지배를 둘러싸고 동유럽의 분열을 촉발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대립은 해양세력인 영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매킨더는 내부 초승달 지역 중 유일하게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인 한국을 주목했는데, 1904년 러일전쟁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일반적



매킨더의 심장지대이론 지도

출처: A 1904 map from Mackinder's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eartland.png>)

으로 일본의 개항 원인을 1853년 미국 페리(Matthew C. Perry) 제독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인이 사할린섬과 더욱 먼 남쪽인 하코다테(函館)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또한 러시아가 일본의 개항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해양세력인 일본이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위협으로 개항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매킨더는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영국의 대립적인 시선으로 러일 전쟁을 파악했다.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해양세력인 영국 함대가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승리한 사실에 주목했다. 첫 번째 지역은 태평양의 필리핀 마닐라였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 전쟁이 발생하자 독일은 스페인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영국은 친미정책을 추진하여 미국 함대를 지원했는데,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미국은 대서양의 쿠바와 태평양의 필리핀을 얻었고, 파나마운하 건설에 착수했다. 영국은 미국과 스페인 간 전쟁에서 미국과 화해하는 첫 번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장소는 남아프리카였다. 영국 함대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보어전쟁 동안 제해권을 확보했다. 보어전쟁에 승리한 영국은 인도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지역은 청국이었다. 영국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지원했는데, 영국 함대가 러일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후 영국은 청국의 문호 개방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매킨더는 러일전쟁 당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청국에 대한 문호 개방, 즉 경제적 이권 때문에 일본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매킨더는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러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를 대신하여 새롭게 내륙지역을 지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조직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전복하고 영토를 정복한다면 ‘황화(黃禍, Yellow Peril)’, 즉 아시아인이 불러오는 재앙이 세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주축지점(Pivot Position)이 지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바다의 정면에 위치한 국가(일본)가 거대한 대륙 자원의 국가(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킨더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국의 균형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매킨더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러일전쟁에 대해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인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적인 시선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내부 초승달 지역 중 유일한 태평양 지역 교두보인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한국에 관한 보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해양세력이 인도와 중국을 심장지대의 정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킨더가 러일전쟁 전후 해양세력인 일본의 한국 점령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sup>

1 김영수, 「지정학자 맥킨더(매킨더)가 바라본 열강의 외교전략과 러일전쟁」, 『한일관계사연구』 87, 2025.

## 지정학자 머헨이 바라본 러일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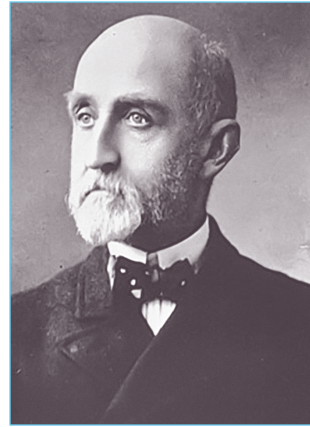
지정학자 머헨(마한, Alfred T. Mahan, 1840~1914)은 ‘해양력(Sea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해군의 건설을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중심의 지정학을 세운 중요한 인물이다.

머헨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해양력의 균형(Balance of Sea Power)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해양력은 대부분 국가 간의 분쟁이나 경쟁, 또는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우선 독점적 규칙이나 금지의 성격을 띤 평화적인 입법 조치를 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해양력 역사의 주요 특징은 어디까지나 군대의 역사였다. 해양력은 무역에 의해 바다나 바다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도 포함하고 있었다. 해군 함대는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의 안정된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머헨은 해양력의 우위가 국가의 위상과 세계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존함대(Fleet in Being)’ 개념을 통해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해양력의 우위가 국제정치와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자국의 함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러일전쟁 전후로 해상에서의 공격적인 ‘현존함대’ 전략을 통해 동해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퇴했다.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봉쇄하고 발트함대까지 격파함으로써 해양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며 지상전에서 보급선을 통제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다.

머헨은 해군 전략에서 요새함대(Fortress Fleet)와 현존함대라는 개념을 통해,



알프레드 머헨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lfred\\_Thayer\\_Mahan](https://en.wikipedia.org/wiki/Alfred_Thayer_Mahan)

머헨은 해군 전략에서 요새함대와 현존함대라는 개념을 통해,  
러시아가 요새함대를 지향했기 때문에  
러일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가 요새함대를 지향했기 때문에 러일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했다.<sup>2</sup> 그는 나폴레옹의 전략에서 목적의 배타성을 강조하며 해군 전략에서도 현존함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러시아 해군이 현존함대를 무시하고 뤼순(旅順)해전과 동해해전에서 ‘전투와 탈출’을 동시에 시도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뤼순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항구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머헨은 러시아 함대가 분산되어 신속한 집결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일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러시아 함대의 신속한 집결 실패가 러일해전 패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는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이 뤼순함대를 격파하면 로제스트벤스키(З. П. 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이 안전하게 진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군 전략을 구사했다. 뤼순함대는 예비 함대를 위해 전장을 비워주는 절망적인 전투를 치렀다. 둘째, 머헨은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함대는 대서양과 태평양 해안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함

<sup>2</sup> 현존함대는 열세한 해군력이 항구에 머물며 적에게 위협을 가하고, 직접적인 결전을 피하면서 세력을 보존하여 적의 행동을 제약하는 전략적 방어 및 견제 전략을 의미한다. 요새함대는 함대가 넓은 바다로 나아가 적극적인 공세 전투를 벌이는 대신, 강력한 해안 요새나 포대의 보호를 받으며 근해(해안 근처)에서 적을 방어하는 함대 운용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존함대의 ‘보존 및 견제’와 요새함대의 ‘거점 방어’ 관점에서 러일전쟁을 분석한 머헨의 견해가 궁금하다면 김영수, 「지정학자 마한(A.T. Mahan)이 바라본 러일전쟁과 동해해전」, 『한일관계사연구』 91, 2026을 참고할 수 있다.

## 뤼순전투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Japanese\\_11\\_inch\\_siege\\_gun\\_shells\\_Port\\_Stanley\\_1904.jpg](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Japanese_11_inch_siege_gun_shells_Port_Stanley_1904.jpg)



현재 21세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파생된 유럽의 무기 지원과 북한의 군사 개입은 유라시아 대륙이 상호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러시아를 둘러싼 유라시아의 분쟁은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다.

대 집중의 원칙'이 위반되었다. 비록 러시아 군대가 총체적인 힘에서는 우세했지만, 계속해서 가장 늦게 도착하고 적은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 러일전쟁과 국제질서

과거 20세기 해양세력인 영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대립은 유라시아의 러일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전 세계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처음으로 주목했다. 현재 21세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파생된 유럽의 무기 지원과 북한의 군사 개입은 유라시아 대륙이 상호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러시아를 둘러싼 유라시아의 분쟁은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다.

당시 국제질서와 러일전쟁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세력인 영국은 대륙세력인 독일과 러시아의 대립을 지지했다. 독일도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원했다. 독일은 서유럽을 분열시키며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동시에 동유럽 지배를 꾀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패권을 놓고 충돌했다. 영국과 독일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 대립으로 서유럽의 혼란을 심화시켰다. 독일과 러시아는 슬라브민족의 지배 문제로 동유럽의 분열을 유발했다.

둘째,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러일전쟁은 대륙세력 러시아와 해양세력 영국의 충돌이 유라시아에서 표면화된 사건이다.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대립했다. 영국은 희망봉과 인도 해역을 장악하고 군사활동을 전개했다. 반면 러시아는 1853년 크림전쟁 이전부터 아무르강을 따라 태평양까지 진출했다. 러시아는 카자크 기병대를 활용해 인도 국경까지 접근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인

도 북서쪽 국경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는데, 중국 연안을 통해 진격하며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 했다. 영국은 군함과 상선의 기동력 덕분에 인도제국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영국과 러시아는 각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1900년 보어전쟁에서 6,000마일 떨어진 남아프리카에 25만 명을 파병했다.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4,000마일 떨어진 만주에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철도로 수송했다. 영국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지원했으나 군사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다. 일본 지원의 배경에는 러시아 견제와 함께 경제적 이권 확보가 필요했다.

셋째, 1898년 미서전쟁(美西戰爭)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팽창을 장기적으로 계획했다. 단기적으로는 필리핀을 점령했다. 러일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맞추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1905년 포츠머스조약을 중재했다. 일본이 완승할 경우 아시아에서 세력 확대가 불가피해 미국과 충돌할 수 있었다. 반대로 러시아가 승리하면 일본의 반발과 새로운 군사 긴장이 우려되었다.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서 해양세력인 영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대립은 러일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미국은 포츠머스조약을 중재함으로써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sup>3</sup>

3 김영수·이항준, 『러일전쟁, 일제강점의 서막』, 역사공간, 2025.

포커스 I

#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송병권(宋炳卷, Song, Byong-kwon)**

상지대학교 지역혁신행정학과 부교수

도쿄대학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40년대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 정치경제질서와 정치사상사 분야를 연구해 왔다. 최근의 관심 주제는 동아시아 지정학, 근현대 동아시아 정치사상이다. 대표 논저로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시기 일본의 '대동아 지정학적 지역질서 인식의 구조와 성격』 등이 있다.



##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1950년대 '태평양동맹' 구상

일본은 2018년 8월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발표한 이후, 뒤를 이은 정권 담당자들도 이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로운 통상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상정된다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평등성을 전제로 한' 지역주의적 구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지역주의라는 방향성이 말 그대로 이상주의적 구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특징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혹은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 상황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세력 투사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역할을 제고하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된 지역과 중첩된다.

여기에는 기존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심축이었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우려와 그에 따른 대응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아시아 지역 내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주요 견제 세력이었던 지역 외 패권국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서브 파트너이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기반이 흔들려 일본의 국익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발표했을 때, 미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팽창을 제어하거나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중국에게 인지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출처: 김경숙,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 중심 이동」,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19(2022년 4월호) ([https://tongsangnews.kr/webzine/1732204/sub6\\_1.html](https://tongsangnews.kr/webzine/1732204/sub6_1.html))

다른 하나는,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미국 영향력의 추세적 약화 과정 속에서 지역 내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어느 쪽의 우려에서 온 것이든 간에,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이 본격화된 이후의 국제 지역 정세 속에서, 미국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연계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을 향해 점차 일방적이

## 지역주의의 전제는 행위 주체의 수평적 관계성?

고 강압적인 투사를 시작했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함께 일본을 중요 파트너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서유럽에서 전개된 ‘평등성을 전제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오히려 지역 내 패권을 향한 경쟁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적 결정체로 구성된 유럽연합(EU)도 사실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글로벌 단위로 투사한 미국 중심의 세계전략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지역단위별 경쟁이라는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서유럽 지역 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프랑스와 독일을 사실상 주도국으로 하여 편성된 지역 내 강대국이 가진 우위성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례와 같이 지역 내 강대국에 대한 자국 이익 극대화 경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 내 정치경제적 통합을 온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셔널리즘적 측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완전무결한 ‘평등성을 전제로 한’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의 전제를 ‘행위 주체의 수평적 관계성’에만 집중하여 이를 ‘제국’ 형성과 유지에 관련한 지배의 계기를 드러낸 이전 시기의 지역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정의하는 전제 자체가 지역주의가 가진 다원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 안에는 여전히 비대칭적 혹은 비대칭성에 가까운 강대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서유럽 지역의 유럽연합은 오히려 예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으며, 각 지역이 보유한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 속에

## 동아시아 지역에는 세 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존재했다.

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명백히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것이 비록 자발적일지라도 위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여전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친미 반공 국가를 중심으로 묶으려 했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란 기획을 살펴볼 차례다. 태평양동맹의 표면적 목표는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반공동맹이란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일본을 여기에 포함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와 달리, 한국과 타이완, 필리핀 등 아시아 반공 국가들은 지난 시기 아시아를 침략했던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오히려 태평양동맹에서 일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의도한 일본을 중심에 둔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공동맹, 즉 아시아판 나토와는 사뭇 다른 ‘반일(反日)’이라는 방향성도 포함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태평양동맹은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각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양자동맹을 맺는 형태인 ‘바퀴살(Hub and Spoke)’ 모양의 지역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서 미국이 놓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반일민족주의를 발생시킨 역사적 경험이었는데, 이는 1940년대 전반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밀접한 역사적 연관성을 지닌다.

##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지역주의적 측면

대동아공영권은 사실 고정된 영역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여부에 따라 확대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 중에서 미일전쟁 발발 직전인 1940년 9월 당시, 일본이 이른바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생존권으로 설정했던 대동아공영권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1940년 9월에 ‘일·독·이 추축 강화에 관한 건(日獨伊樞軸強化ニ關スル件)’이라는 문서를 결정하였는데, 여기서 대동아공영권의 영역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sup>1)</sup>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역은 ‘일만지(日滿支)’, 즉 일본(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포함)과 ‘만주’, 그리고 중국이다. 이 일만지를 근간으로 하여, 구 독일령 위임통치제도(남양군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태평양 도서 지역, 태국, 영국령 말레이, 영국령 보르네오, 네덜란드령 동인도, 버마(지금의 미얀마, 당시 영국 식민지인 인도제국의 일부),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및 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신질서’라는 개념은 당시의 지역주의적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는 유럽신질서(아프리카 포함), 소비에트신질서, 미주신질서와 더불어 동아신질서를 병립시켜, 세계를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간 상호 인정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진한 발상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서 독일이, 공산권 지역에서는 소련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적 공간 질서 개념이었다. 유럽에서 영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상정하는 등 중심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했지만,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구상한 ‘4개의 경

1 『別冊第3 昭和15年9月4日 總理, 陸, 海, 外4相會議決定  
日獨伊樞軸強化に関する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2120369200, 『第2次近衛内閣より開戦迄  
昭和21年2月~6月』(防衛省防衛研究所).



### 일본의 '생존권' 야망(1940)과 실제 침공지역

1940년 9월 16일 대본영정부부연락회의 결정 『일·독·이 추축 강화에 관한 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출처: 『しんぶん赤旗』, 2024. 12. 8([https://www.jcp.or.jp/akahata/aik14/2014-12-08/2014120806\\_01\\_1.html](https://www.jcp.or.jp/akahata/aik14/2014-12-08/2014120806_01_1.html))

‘찰국가’ 개념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일본의 ‘동아신질서’를 전개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권 지역이 대동아공영권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 상정한 세력권 설정이란 측면이다.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련의 생존권에 인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독일 및 이탈리아와 함께 소련을 양 방면에서 견제하고자 했다. 즉, 추축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적은 방면으로 소련의 세력권 진출 방향을 유도하면서도, 위에 설정한 생존권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부분에서 대륙국가인 소련에 대한 견제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양세력인 일본이 대륙세력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구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일본을 중심으로 그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에 이어 중국을 포함하고, 동남아시아, 태평양 점령지역을 한편으로 하며, 서유럽과 미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연안과 바다를 둘러싸고 벌이는 '상호 억제와 돌파'라는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국, 그리고 소련을 다른 한편에 대항하는 구조를 취했다. 표면적인 목표는 '아시아 민족의 해방'이었지만, 조선과 타이완 같은 자국의 식민지는 제외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은 대륙과 해양에서 자국의 식민지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 세력과 이를 돌파하려는 제국주의 일본 사이의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신질서'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 내 패권국가들의 상호 관리를 통한 평화 유지라는 지역주의적 명분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950년대 '태평양동맹' 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반공 친미 국가를 중심으로 공산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일차적 목표는 당연히 반공 국가들의 공산 국가 봉쇄였으므로, 해양세력 미국이 대륙국가 소련과 중국을 포위하는 구조였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을 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일 내셔널리즘과 부딪히며 심리적 반발을 낳았다. 이 반일 내셔널리즘의 이면에는 해양국가 일본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미국이 일본을 견인하고 여기에 한국을 연결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고, 다시 여기에 타이완을 연결하여 1950년대에 실패한 태평양동맹을 복원하고, 나아가 이를 인도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대항했던 미국의 구상이 일본을 견인하며, 그 대결 객체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하는 상황이므로, 사실은 태평양동맹 구상에서 배제되었던 일본을 포함한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그 범위도 대동아공영권 구상 속에 드러난 영역의 최대치와 거의 동

일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과거 가장 경계한 모델이었던 대동아공영권의 주체였던 제국주의 일본이 상정한 대항 객체가 미국·서유럽에서 중국·러시아로 바뀐 새로운 ‘대동아공영권’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동아공영권이든 인도-태평양 전략이든 비록 시기를 달리하지만, ‘지역주의적 세계 분할’이라는 지정학적 욕망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해양국가가 대륙정책과 해양정책을 결합하여 연안국가가 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과거 영국처럼 해양의 ‘점’들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대륙이라는 ‘면’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본이 가진 욕망의 거울로서 마주한 중국 역시 연안국가가 해양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이 추구했던 ‘점’과 ‘면’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욕망이란 측면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대내적으로는 지배지역을 포함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설득 논리를 확보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주의적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와 그 설득논리 측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적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결국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경험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더욱 면밀히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

포커스 II

# 21세기 지정학 경쟁

## 미국의 대외 전략과 세계 지정학의 미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21세기 그레이트 게임과 중국의 지정학 전략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지정학적 경쟁 시대 '끼인 국가'의 선택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행정정책학회장

## 일본의 21세기 지역질서 구상, FOIP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러우전쟁 이후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

풍 치 끼엔 베트남국립대학교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정치학부 정치학 강사

# 미국의 대외 전략과 세계 지정학의 미래

**전재성(全在晟, Chaesung Chun)**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을 ‘영원한 전쟁(endless wars)’으로 끌어들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해외 개입으로 막대한 국력이 소모되었고,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이 만든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군인들의 피와 납세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혼란과 반미 감정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했다. 그리고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역설이야말로 오늘날 미국의 외교전략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트럼프는 왜 스스로 경고했던 함정에 빠졌는가? 이것은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어떤 전략적 논리의 산물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트럼프 정부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대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 ‘미국 우선주의’ - 2025년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의미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2025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문서를 살펴보는 것이다. 백악관이 정부의 외교전략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이 문서는 트럼프 정부 외교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핵심은 지난 30년간 미국이 추진해온 광범위한 지구적 개입 전략, 혹은 패권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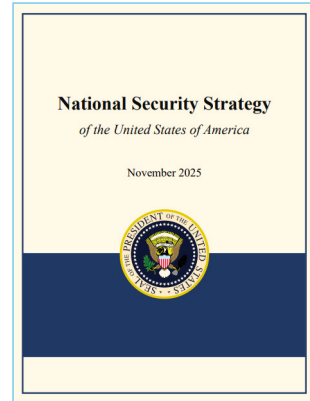
냉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세계 전체를 하나의 지정학적 단위로 바라보았다.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자유시장을 공고히 하고, 국제제도를 통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유지하면 세계는 더 안전하고 미국도 더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했다. 민주당은 이것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 불렀고, 공화당 주류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라 불렀다. 이름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자 설계자이며, 패권적 리더십으로 세계에 안정과 평화를

세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대신,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전략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의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패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9·11테러와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사태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되었다. 수많은 내전이 발생했고,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을 지속적인 전쟁 지원이라는 뜻에 걸리게 하였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모두 실패한 전략이다. 이라크에서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혼란이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웠지만 결국 탈레반이 돌아왔다.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동맹국을 지키고, 국제기구에 돈을 대면서 정작 미국 본토의 일자리와 인프라는 무너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즉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은 지구화와 대외 개입이 워싱턴 기득권층과 행정국가가 미국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거래였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정서에 강하게 공감하며 절제되지 않은 대외 개입이 미국의 국력을 과도하게 소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정학적 청사진은 무엇인가.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가 제시하는 답은 ‘지역별로 분리된 지정학 전략’이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대신,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전략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의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패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서반구에서는 세력권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세력균형 전략으로, 유럽과 중동에서는 동맹국에 짐을 넘기



미국 국가안보전략 문서(2025)

출처: 미국 백악관

고 스스로는 뒤로 물러서는 절제와 역외균형 전략으로 대처한다는 비대칭 지역별 지정학 전략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군사 개입은 저비용, 단기간, 성공 보장이 전제될 때만 실행한다는, 이른바 ‘신와인버거독트린(New Weinberger Doctrine)’이 그 원칙을 관통한다.

## 먼로독트린의 귀환-서반구는 미국의 뒷마당

이 전략의 첫 번째 축은 서반구다. 트럼프 정부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사실상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재선언했다. 파나마운하에 대한 주권 주장,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언, 그린란드 확보 구상 등은 충동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일관된 논리로 엮이기도 한다. 200년 전 먼로 대통령이 천명했던 “서반구는 외세의 손이 닿지 않는 미국의 공간”이라는 이른바 ‘먼로독트린’을 21세기 버전으로 되살린 것이다.

저변에 깔린 논리는 강대국이 자기 주변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인데, 가까운 주변, 즉 근외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이익이 걸린 공간’이라 주장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역사적 영토’라 변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 논리를 미국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이민을 막고 국경을 통제하며, 마약의 유입을 막는 한편, 중남미에서 급증하는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 세력권 논리를 전면화하는 순간 타 강대국의 세력권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현저히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힘의 논리를 미국이 먼저 정당화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논리도 더불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오늘날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게 중국은 미국보다 더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브라질, 칠레, 페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다. 지리적 근접성을 내세운 미국의 세력권 전략이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영향력을 지리적으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중국을 가장 강력한 상대로 생각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 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역외 균형으로 후퇴하더라도, 중국 견제만은 예외적으로  
전진 개입을 유지한다는 논리였다.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력권의 지리적 재확정과 전 지구적 영향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이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인도-태평양의 딜레마-아시아 중시 전략은 지속될 수 있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각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증하는 중국의 힘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중요한 외교대전략의 하나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아시아 중시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과 중동 등 타 지역으로부터 점차 빠져나와 21세기의 진짜 경쟁 무대인 아시아로 전략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트럼프 1기도, 바이든 행정부도 이 방향성은 유지했다. 중국을 ‘유일한 체계적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은 당파를 넘은 워싱턴의 전략적 합의였다.

트럼프 2기도 출발은 같았다. 2025년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중국을 가장 강력한 상대로 생각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 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역외 균형으로 후퇴하더라도, 중국 견제만은 예외적으로 전진 개입을 유지한다는 논리였다.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같은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강화하고,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구상도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은 아시아 중시 전략의 초점을

흐트러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당겼고, 이란전쟁은 중동을 또다시 미국의 시간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었다. 전략 문서에서 아시아 우선을 선언하는 일과, 실제로 외교적 에너지와 군사자원을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조치는 다른 문제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정부가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초점을 잃어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패권을 재조정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지정학적 도전 세력에 직면하면서 미국에게는 큰 과제가 주어졌다. 즉, 미국이 복수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기에 직면할 때, 인도-태평양에서 세력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중국은 미국이 다른 곳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숙원이던 대만 통일과 남중국해에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을 실제로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신와인버거 독트린의 논리에 따라 ‘비용 대비 성과가 불분명한’ 개입을 회피할 것인가. 동맹국들이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 이란전쟁과 국제 공공재의 위기 - 패권의 시험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의 성공에 고무되어 실행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신와인버거독트린의 실전 적용이었다. 단기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해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흔들면,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을 큰 비용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반이란 정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집요한 설득이 그 판단에 힘을 더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정치적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짧고 강한 압박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었다. 전쟁은 제한적 타격의 범위를 넘어 확



이란전쟁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2026. 4. 2.)

출처: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dl6p4rzy1o>

대되었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해상 수송로 문제가 본격적인 국제 현안으로 부상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기능 마비는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급해온 핵심적 국제 공공재, 즉 해상교통로의 자유와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장면이다.

이란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그 군사력을 통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세계를 상대로 시험한 무대가 되었다. 군사적 우위가 정치적 성과로 전환되지 못할 때,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필연적으로 약화된다. 패권의 정당성은 힘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힘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전쟁 이후의 세계다. 국제 공공재란 특정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공급하지만 모든 나라가 혜택을 누리는 것들이다. 공해상의 항행 자유, 핵 비확산 체제, 글로벌 금융 안정 등 많은 것을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사실

이란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그 군사력을 통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세계를 상대로  
시험한 무대가 되었다.

상 혼자 떠받쳐 왔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핵 비확산 체제의 균열, 기후·생태 위기의 심화,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보건 안보의 위기,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 공공재를 공급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공공재를 동맹국과 우방에게만 선별 제공하는 ‘클럽재’로 전환한다면 국제질서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진입하게 된다. 규칙에 기반한 공공재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적으로 배분하는 패권으로 미국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된다. 그 균열의 틈새에서 여러 수정주의 세력들이 어떠한 대안 질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를 획득할 것인가, 향후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 한국의 선택 - 피해 최소화를 넘어 국제질서 조성자로

미국 패권의 약화 혹은 그 불확실성은 국제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한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와 억제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이 공급하는 공공재가 약화되는 틈새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할 수 있다. 이란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는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회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트럼프의 정치적 지지 기반 역시 불개입과 내부 집중을 강하게 요구하는 세력이다.

국제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고,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미국의 패권 재조정과  
중국의 부상이 만들어내는 공백을 책임 있게 채우는 역할,  
이것이 한국이 모색해야 할 본격적인 전략이다.

한국에게 이것은 실존적 도전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나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동시에 중국이 중요한 교역국인 나라, 한국만큼 이 구조적 모순을 직접 체감하는 나라도 드물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초점을 잃어가는 상황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불확실성을 더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압박, 공급망 재편, 기술 통제 강화 등 미중 경쟁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압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국 경쟁의 틈새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동적 전략만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 역량, 민주주의적 정통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라는 복합적 자산을 갖추고 있다. 국제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고,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미국의 패권 재조정과 중국의 부상이 만들어내는 공백을 책임 있게 채우는 역할, 이것이 한국이 모색해야 할 본격적인 전략이다.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십 그룹에 한국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 21세기 그레이트 게임과 중국의 지정학 전략

**김인희(金仁喜, Kim Inhe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언어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중앙대학교, 중국의 중남민족대학과 산둥대학에서 근무했고, 윈난민족박물관과 뉴욕시립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소호씨 이야기-산둥 다원커우 동이족의 탐색과 발견』,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유민』, 『치우, 오래된 역사병』, 『중국 애국주의 흥위병, 분노청년』, 『또 하나의 전쟁, 문화전쟁』, *Korea-US-China Trilateral Relations in the Xi Jinping Era, Chinese Patriotic Red Guards-Angry Young Men*이 있다.



## 강대국 경쟁과 중국 지정학의 귀환

이 거대한 게임의 시작은 2008년이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G20 참여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였음을 알렸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었다. 2009년에서 2013년은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 외교정책의 공격적 전환은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e to Asia)’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미국의 각종 안보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기초를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global war on terror)’에서 ‘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으로 대체했으며, 미중 관계를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관계로 규정했다.

많은 이들은 “냉전 종식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미국 중심의 짧은 일극체제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오던 세계화 담론은 강대국 경쟁과 지정학 경쟁으로 전환했다”라고 한다. 이제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세계 정치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실, 1990년대 이전 중국은 지정학을 팽창주의 이론이자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이론이라 하여 연구를 금지했다. 중국 지정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가 발표된 2013년경 급상승한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사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무관치 않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는 명확하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을 다른 국가에 투사할 수 있으나, 약소국은 자신의 국경 내, 심지어는 자신의 국가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쩌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이 자신의 힘을 더 넓은 공간에 투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은 아시아태평양에 머무르지 않으며,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략적 신개척지’라 명명한 극지, 우주, 사이버 공간, 심해 등 새로

어쩌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이  
자신의 힘을 더 넓은 공간에 투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은 아시아태평양에 머무르지 않으며,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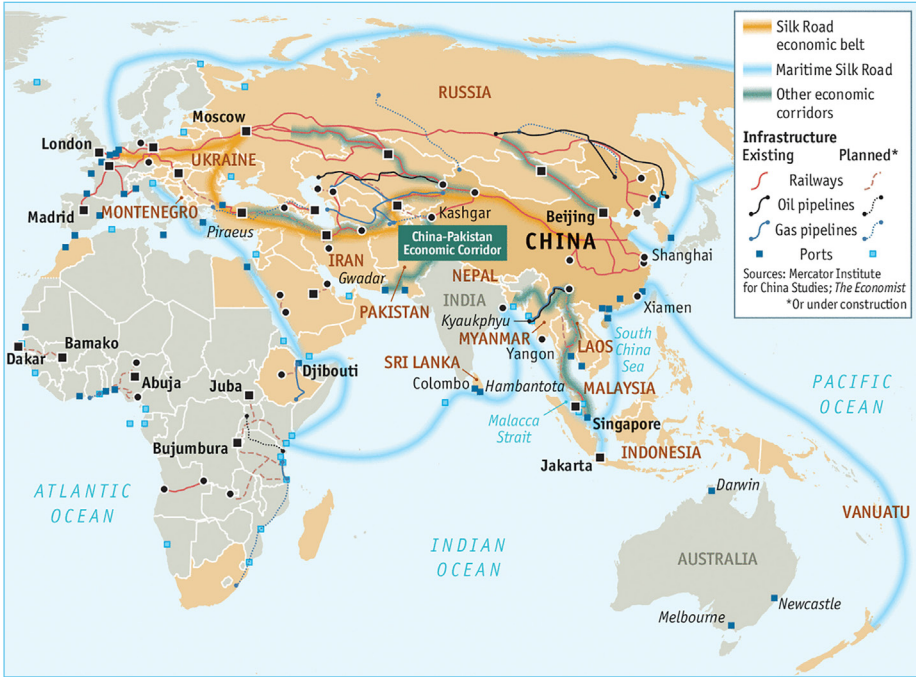
운 영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 중국 지정학의 '전략적 공간'

'전략적 공간'이란 용어는 중국 지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략적 공간'은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지리적 국경이 영토, 영해 및 이에 상응하는 영공을 의미한다면, 전략적 공간은 해당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지리적·공간적 한계를 의미한다. 전략적 공간은 지리적 국경 외에도, 광대한 대륙붕과 공해, 극지, 그리고 우주 공간과 같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광대한 영역도 포함된다. 그리고 군사력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경제, 과학기술, 정치, 사회, 국방 및 이를 뒷받침하는 대외관계 등 실질적 권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전략학』<sup>1</sup>에서 '전략적 공간'은 "국가 관할하에 있는 영토와 그 너머에 있는 국가 경계 및 안보 목표를 추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전략적 공간' 개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보'와 '생존' 같은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략적 공간' 개념이 독일과 일본의 정치지리학적 개념인 레벤스raum(Lbensraum)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레벤스raum은 독일어로 '생활공간'이라는 뜻으로,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 및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핵

1 军事科学院军事战略研究部, 『战略学』, 军事科学出版社, 2013.



### 중국 일대일로 노선도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스, 우크라이나를 거쳐 영국 런던에 이른다. 해상 실크로드는 인도양뿐만 아니라 북극해,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출처: "China has a vastly ambitious plan to connect the world," *The Economist*, Jul 26, 2018(<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8/07/26/china-has-a-vastly-ambitious-plan-to-connect-the-world>)

심 이데올로기였다. 이들은 국제관계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지리정치학적 관점을 구성하고, 강력한 군국주의를 추구하였다.

전략적 공간은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나뉜다. '보이는 공간'은 지구 표면상의 지리적·물질적 공간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은 권력 구도와 이데올로기 파워가 주도하는 정신적·이념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데이터·정보 공간, 기술 표준의 공간, 공급망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우주 기반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전통 지정학이 '보이는 공간'을 중시하였다면, 현대 지정학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보이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으로 일대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 정부는 ‘보이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으로 일대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의 목표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의 목표는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적 국제질서를 정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물리적 연결성을 제공한다면, 인류운명공동체는 참여국 간 정신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물리적·정신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보이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일대일로

일반적으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아시아로의 재균형’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시한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중동과 유럽 지역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중국은 베이징대학 교수인 왕지쓰(王缉思)의 서진(西進) 전략을 참고하여 일대일로를 추진하였다. 왕지쓰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유럽·인도·러시아 등도 동방을 향하고 있으니,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시야를 연안 영토와 전통적인 경쟁 상대 및 협력 파트너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서진 전략을 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중국은 2013년 육로를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기점으로 2014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였다. 초기 일대일로는 신흥국 및 중산층 경제국들의 하드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국 건설산업의 과잉 생산을 해외에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었다. 이후 일대일로는 중국의 디지털, 보건 및 청정 기술 생태계를 확산하고, 군대와 경찰력을 확대하며, 자국 통화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까지 중국은 151개국 및 32개 국제기구와 약 200건의 일대일로 협력 및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대일로는 세계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아우르며, 전 세계 GDP의 55% 이상을 제공하고, 에너지 매장량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어떠한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까?

첫째, 유라시아를 중국 중심의 경제벨트로 통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하여 중국 중심의 경제지형으로 재편하려 한다. 이 외에 에너지 개발 및 협력,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조성, 금융협력 및 자금 지원, 디지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유럽에 도달하는 내륙 운송로는, 중국 신장(新疆)에서 동유럽까지 11일 만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 운송로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라는 단일 공간으로 취급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 규범, 규칙으로 유라시아 지역 질서를 재구성하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연결성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에 동화시키려 한다. 이 질서가 실현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규범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재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지정학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11월 '중국의 말라카해협 딜레마'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최고 지도자가 말라카의 봉쇄가 중국에 위협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 수입 원유의 약 80%가 말라카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서구와 중국이 벌이는 거대한 게임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대일로를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던 ‘그레이트 게임’에 비유하곤 한다.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이 해협은 중국 석유의 생명선이라 불린다. 즉, 말라카해협을 장악하면 중국의 에너지 통로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해협은 현재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싱가포르가 통제하고 있다. 말라카의 딜레마는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실시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다. 해상 실크로드는 말라카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말라카해협을 피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구에서 육로를 거쳐 중국 신장성에 도달하는 노선으로, 역시 말라카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을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서구와 중국이 벌이는 거대한 게임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대일로를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비유하곤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이 새로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sup>2</sup>라고 하였다.

2 Clover, C., and L. Horny, “China’s Great Game: Road to a new empire,” *Financial Times*, Oct 13, 2015(<https://www.ft.com/content/6e098274-587a-11e5-a28b-50226830d644?syn-25a6b1a6=1>).

##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 전략-인류운명공동체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강조하여 중국 중심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너무 모호해서 수사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국제질서와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중국의 비전이며, 중국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중요하다.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고대 중국의 세계정치 이념인 ‘천하(天下)’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자인 자오팅양은 2005년 『천하체제』<sup>3</sup>를 출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천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모두 포괄하며, 따라서 천하체제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세계정치체제라고 한다. 그리고 천하체제는 비록 위계질서가 있지만 관용적인 통치로 천하가 평화로웠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서구의 베스트팔렌체제의 가장 큰 정치 단위는 ‘국가’이며,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베스트팔렌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천하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주석도 자오팅양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대동(大同), 천하일가(天下一家), 천하위공(天下爲公)이 인류운명공동체의 중요한 이념적 자원이다”<sup>4</sup>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국내외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중국인의 피 속에는 침략의 DNA가 없다”, 그리고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명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세계 모든 문명은 동등하다”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문명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3 赵汀阳, 『天下体系: 世界制度哲学导论』, 江苏教育出版社, 2005.

4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的倡议与行动」, 2023. 9. 26([http://www.scio.gov.cn/gxzt/dtzt/49518/49519\\_32677/index.html](http://www.scio.gov.cn/gxzt/dtzt/49518/49519_32677/index.html)).



### 인류운명공동체가 천하질서의 재현임을 보여주는 그림

중간의 인물은 시진핑 주석이고, 왼쪽은 공자, 오른쪽은 마오쩌둥이다. 공자는 천조(天朝), 기미(羈糜), 천하(天下)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오쩌둥은 인류운명공동체, 중국공산당, 통전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Didi Kirsten Tatlow, "CHINA'S COSMOLOGICAL COMMUNISM: A CHALLENGE TO LIBERAL DEMOCRACIES Imperial philosophy meets Marxist orthodoxy in Beijing's global ambitions," *MERIC'S CHINA MONITOR*, July 18, 2018, p. 3.

실제 목적은 미국에 대항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구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人類文明新形態)'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남긴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유라시아에서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다극적 지정학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sup>5</sup>라고

5 Ting-mien Lee, "'New Forms of Human Civilization': China's Eurasian Foreign Policy," *The China Review*, vol.25, no.1, 2025.

시진핑 주석은 “문명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세계 모든 문명은 동등하다”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문명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목적은 미국에 대항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다.

‘천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중국의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적 전략을 관통하는 용어는 ‘연결’이다. 일대일로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연결한다면, 인류운명공동체는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한다. 중국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유라시아를 재구성하고 중국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서양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군사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대안적 세계질서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21세기 가장 심오한 ‘체제적 도전자’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는 일부 성과를 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에 의하면 일대일로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는 정치·외교적으로 이득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프로젝트에서 예상된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부채 함정 외교’는 일대일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의 경우 유라시아의 권위주의 국가

중국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유라시아를 재구성하고  
중국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서양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군사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대안적  
세계질서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21세기 가장 심오한  
‘체제적 도전자’라 할 수 있다.

와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는 21세기에 부활한 ‘계층적 통치질서’라는 것이다.

중국이 유라시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맞서 서구는 강력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2022년 선진 7개국(G7)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경제구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2023년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EC)’이 출범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유럽연합,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게임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계질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지정학적 경쟁 시대 ‘끼인 국가’의 선택

**전봉근(田奉根, Bong-geun JUN)**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행정정책학회장

국립외교원 교수와 안보통일연구부장,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KEDO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연구 분야는 북핵문제, 한국 외교, 동북아 국제정치, 군축비확산, 원자력 외교, 전략 연구 등이다. 주요 저술로 『한반도 국제 정치의 비극』, 『북핵 위기 30년』, 『비핵화의 정치』, 『신 국제질서와 한국 외교전략』(공저) 등이 있다.



##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에 ‘끼인 국가’의 운명

세계 전쟁사와 외교사는 소수 강대국의 승패에 관한 기록이다. 현대 국제정치 이론도 소수의 강대국 간 세력경쟁과 세력균형에 집중한다. 실제 소수 강대국이 국제정치의 규칙을 정하고, 대다수 약소국은 강대국 간 전쟁과 거래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과 다르지 않다.

강대국의 경쟁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운명은 25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저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사』의 ‘멜로스 대화’ 편에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당시 스파르타의 식민 동맹국이었던 멜로스가 적대 강대국인 아테네로부터 침공당하자, 중립을 제안하며 존립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이때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인의 입을 빌려 “강대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고, 약소국은 당해야 할 것을 당할 뿐이다(The strong do what they do,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라는, 약소국의 운명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멜로스가 다시 소국에 대한 대국의 정의(正義)를 거론하자, 아테네는 “정의는 힘이 있는 국가만이 주장할 자격”이 있다며 일축했다.

결국 아테네는 적의 세력권을 약화하는 안보적 이유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위신을 과시하고 다른 소국에 본보기를 보인다는 명분으로 멜로스를 멸망시켰다. 당시 멜로스는 후원 강대국인 스파르타가 지원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경쟁국인 아테네와 전쟁을 피하려고 멜로스를 외면했다. 여기서 멜로스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강대국 사이에 놓인 수많은 중소 ‘끼인 국가’의 비극을 대변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불변하는 강대국 행태를 보여준다. 현대에 멜로스 와 같이 주권국가가 침략전쟁으로 소멸하는 사례는 없지만, 멜로스의 운명과 비극은 오늘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하면서, 탈냉전기의 짧았던 미국 패권시대가 끝나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재개되었다. 이때 강대국의 세력권이 서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에 있는 ‘끼인 국가’는 자칫 멜로스의 운명

강대국의 세력권이 서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에 있는  
'끼인 국가'는 자칫 멜로스의 운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가 탈-탈냉전기의 첫 번째 희생 국가가 되었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랜드 체스보드(The Grand Chessboard)』(1997)에서 이를 예언했다. 그는 '끼인 국가' 중에서도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커서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는 5개 '지정학적 중추(geopolitical pivots)'를 지목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한국, 이란이 포함되었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은 매우 열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적대 진영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전략적 중추지대로 보았다.<sup>1</sup> 푸틴 대통령의 최고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재점령하는 것이겠지만, 러시아의 감소된 국력을 볼 때 불가능하다. 최악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에 가입하는 것인데, 이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저지해야 하는 금지선이었다. 러시아는 이런 지정학적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과 합병, 그리고 서중부 지역의 중립화와 비무장을 강요하려고 했다. 러시아의 이런 국경 안보전략은 과거 임진왜란, 구한말, 한국전쟁 시 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명분을 연상시킨다.

현재 '끼인 국가'의 비극은 중동의 걸프 지역에서 또 반복되었다. 미국-이란 전쟁의 중간에 끼인 걸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이 겪고 있는 전쟁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 이상 서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제로섬적 경쟁관계

1 전봉근, 「강대국에 낀 국가의 비애, 국론분열부터 막아야-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중앙일보』, 2022. 2. 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052>).



**중·소 블록과 3개의 주요 전략적 전선**

출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에 있었다. 따라서 온갖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고 상대를 최대한 파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란의 공공연한 적국도 아닌 중소 걸프 국가가 이란의 주요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었고, 전쟁 당사자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막상 걸프 국가들은 역내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꺼린다.

걸프 국가는 오랫동안 바로 이웃의 지역 강국이자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이란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최강국이자 해양세력인 미국의 안보 후원을 받기로 선택했다. 그 대가로 미국에 약 10개 해공군 기지를 제공하고, 약 3만 명의 미군 병력을 수용했다. 이런 지전략은 대다수 중소 국가가 선택하는 옵션이다. 한국,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다. 평시에 역내의 미군 기지와 병력

은 걸프 국가의 체제안보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미국은 역내 군사력을 이용하여 걸프 국가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걸프 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적국인 이란을 제재하고 압박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은 원거리에 포진한 미군 전력을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인근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바로 걸프 국가들이 극력 피하려고 했던 ‘전쟁 연루’가 발생했다.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지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미국에 군사기지 제공을 거부하면 ‘동맹 방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이란에 보복하는 옵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이란의 재보복과 확전이 두렵고, 미국의 보호가 효과적이거나 영원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중소 국가, 특히 끼인 국가의 운명은 험난하다. 때로는 파쇄국가가 되고, 심지어 지도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강대국 정치의 희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 국가도 동맹, 집단방위, 공동안보, 등거리 외교, 해징, 중립, 지역협력, 유사국 연대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생존하고 번성했다. 현대의 핵무기 시대에 강대국 전쟁은 현저히 줄었다. 근대 이후 민족주의와 국민국가가 확산하면서 중소 국가의 결집성과 저항성은 커졌고, 강대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최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도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 정치를 완충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다시 돌아왔지만, 중소국의 미래를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 전통 동북아 지정학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교훈

한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대륙의 ‘한 귀퉁이에 위치한 소국’으로서 역내 패권국인 중국을 바로 이웃에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이 강요하는 천하질서와 조공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끝까지 항거하는 다른 옵션은 아마 한국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세력권에 속했지만, 통일신라부터 1,500년간 몇 차례 왕조의 변화만 있었을 뿐, 거의 단절 없이 국가적·문화적·영토적 온전함을 지켜왔다. 이런 한국의 끈질긴 생존

한국은 중국의 세력권에 속했지만, 통일신라부터 1,500년간  
몇 차례 왕조의 변화만 있었을 뿐, 거의 단절 없이  
국가적·문화적·영토적 온전함을 지켜왔다.  
이런 한국의 끈질긴 생존사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사례다.

사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사례다. 수천 년간 단일 영토에서 자연국가를 형성하고 단일 민족과 문화를 유지했던 한국인의 강한 저항성과 회복탄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2</sup> 더욱이 한국은 역내에서 중견국 지위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독립국가로서 번성했다.

다른 한편, 역내 세력의 흥망성쇠와 이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수시로 지역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입었다. 특히 중원의 중화 세력, 북방 초원의 유목 세력, 만주 세력, 일본 세력 등이 새로이 흥기하거나, 지역 패권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전쟁에 말려들었다. 19세기 말 한반도가 근대 국제정치체제에 편입된 이후에는 주변에 포진한 세계 4대 강대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에 말려들어 전쟁터가 되거나, 주권을 잃거나, 분단되는 고통을 겪었다.<sup>3</sup>

임진왜란 이전까지 한국이 끌려들어갔던 동북아 전쟁은 주로 중원 제국의 영토 팽창을 위한 정복전쟁 또는 중원의 농경 세력과 북방의 유목 세력 간 패권 경쟁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국은 중원과 북방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만 했다. 통상적으로 중원 세력은 문명이 우월하고 약탈적이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우선적인 편승의 대상이었다. 반대로 유목 세력은 문명 수준이 낮고 약탈적이어서 경계의 대상이었다. 한국은 유목 세력이 약할 때는

2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총서.

3 전봉근,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박영사, 2023.

과거 한국이 중국 대륙의 양대 강대국에 더해 남방의 안보위협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의 상황은, 오늘의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고민과 구조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

회유하고 제어하는 기미(羈縻)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유목 세력이 결집하여 막강해지면 대체로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다.

중원과 한국은 상호 현저한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탈적인 북방 세력에 대해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하여 자연동맹의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북방 세력의 군사력이 막강한 데다 기동력도 높아 한중 군사협력은 별 효용이 없었다. 과거 한국이 중국 대륙의 양대 강대국에 더해 남방의 안보위협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의 상황은, 오늘의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고민과 구조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임진왜란 때 한국은 처음으로 대륙이 아니라 해양에서 접근하는 적대세력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통적인 북방의 안보위협에 더해 남방의 안보위협까지 대응해야 하는 복배수적(腹背受敵)의 열악한 안보환경에 처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경쟁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전방, 후방의 이중적인 안보위협을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은 한반도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했다. 이런 새로운 지정학적 구조는 결국 1945년 한반도의 분단을 낳았고, 분단을 계속 재생산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동북아의 양대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선’이 종래 한반도 북방의 요동 지역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남하했다. 이때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경쟁에 더욱 깊이 끌려들어갔다. 이후 양대 세력 간 중간지대인 한반도가 주 전쟁터가 되면서, 전쟁 피해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으로 발생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역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대륙의 최약한 패권국인 중국과 신흥 해양세력인 일본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양극체제가 열렸다. 조선

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고, 더욱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와 같이 또다시 중일 간 지정학적 경쟁의 한복판에 끼였다.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조선의 생존과 자율을 보장했던 동아시아 천하질서와 조공체제도 소멸했다. 동북아 근대 열강체제에서 자강력도 보호 동맹국도 갖지 못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대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냉전적 양극체제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냉전기 동북아는 대륙 공산 진영과 해양 자유 진영으로 양분되었고, 한반도는 미소 냉전의 지정학적 대치선이 통과하면서 양분되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치열한 세력경쟁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발화했다. 한국전쟁은 남북 간 내전인 동시에 냉전의 양대 진영이 충돌한 국제전쟁이었다. 탈냉전기에 미국 패권이 지배한 ‘단극의 순간’을 지나, 동북아와 한반도는 다시 미중 전략경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갔다.

남북 분단은 미소 간 지정학적 경쟁의 산물이었다. 통일의 지정학적 여건이 조성되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 한반도를 각자 자신의 세력권으로 당기는 중력이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조성된 현대 지구 지정학의 동학을 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경쟁은 끝날 조짐이 없다. 이런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안타깝지만 남북 분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미중 경쟁의 태풍권에 들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상당 기간 한국은 남북 경쟁에 더해 미중 경쟁의 직접적인 지정학적 중력까지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지정학 옵션과 선택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악화하면서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의 전 영역에서 ‘줄서기’와 ‘선택’을 압박받고 있다. 사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모두와 협력이 필요

하다. 하지만 미중 양국 모두 서로 제로섬적 지정학 경쟁에 빠지면서 한국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헤징전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지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끼인 국가’는 대개 네 가지 상황에 놓인다. 첫째, 한 강대국과 동맹하고 보호를 받는 경우다. 동맹은 끼인 국가의 가장 보편적인 지전략이며,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토, 북중동맹, 북러동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서양의 외교 격언은 분쟁 중인 이웃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강대국, 특히 해양 국가와 동맹할 것을 조언한다. 둘째, 강대국의 충돌 사이에서 강압을 이기지 못하거나 내부 분열로 인해 ‘파쇄국가’가 되어 분열·분할·소멸·점령되는 경우다. 한국의 구한말과 식민지 시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우크라이나도 유사한 처지에 있다. 셋째, 중립, 등거리외교, 헤징외교 등으로 중추 또는 피벗국가(pivot state)가 되는 경우다. 강한 중소국, 지역 강국이 이에 해당한다.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스위스 등이 그런 사례다. 넷째, 동맹이나 국제연대를 거부하고, 자체의 강한 군사력과 저항력으로 배타적인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경우다. 북한, 이란, 쿠바 등이 이런 경우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독립과 주권을 보존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자유통상에서 배제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오늘 한국은 역사적 경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을 갖는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 옵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국민적 지지도 높다.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냉전기 자유 진영의 맹주국도, 탈냉전기의 세계 패권국가도 아니다. 미국의 군사역량으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초강대국인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 미중 충돌 시 한국은 우크라이나, 걸프 국가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사드(THAAD) 사태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미국도 속수무책이었다. 대만사태에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참여하면,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는데, 과연 이에 대한 미군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헤징외교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축으로 하면서도, 자강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협력, 남북 공존, 유사국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복합적인 외교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주변 강대국과 북핵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옵션이 있다. 핵무장론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정세를 냉정히 판단하면, 핵무장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다. 핵무장한 한국은 독자외교를 추진할 것인데, 미국은 이런 한국과 동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인 통상국가와 중견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 국민도 북한, 이란, 파키스탄처럼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원하는 국민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완화하는 헤징외교 옵션이 있다.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의 지정학 시대를 맞아, 한국도 신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헤징외교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축으로 하면서도, 자강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협력, 남북 공존, 유사국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복합적인 외교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한다.

탈냉전기 한국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누구도 놓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서 한국에 필수적인 안전보장과 첨단과학기술과 수출시장을 제공하는 대국이다. 그런 미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중국과 협력관계도 한국의 외교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에 최인접국이고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배후국가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해 관계국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전략을 선택해야 하나? 한국은 중국의 천하질서, 일본 제



#### 한반도를 중앙에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

출처: 주한미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53>)

국주의, 냉전기 자유 진영 질서, 탈냉전 미국 패권질서 속에서 오랜 기간을 지낸 결과, 단일 강대국과 동맹하고 편승하는 데 익숙하다. 오랜 한국 역사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는 예외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율외교, 헤징외교, 피벗외교, 전략적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외교안보 주류집단에서 헤징외교, 미중 균형, 전략적 자율성 등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최근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했다.<sup>4</sup>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sup>4</sup> 「주한미사령관 “한국은 中 앞 항공모함 같아” …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강조」, 『연합뉴스』, 2025. 5. 16. (<https://www.yna.co.kr/view/MYH20250516013200038>).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를 통해 대중, 대러, 대북 군사경쟁에서 한국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했다.<sup>5</sup> 이런 미국이 구상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과 가치는 미국-이란전쟁에서 걸프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한국의 지전략은 바로 이런 강대국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한국의 지전략을 처음으로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 진단과 처방은 오늘 우리 현실에 더욱 부합하므로 결론을 대신하여 아래에 인용한다.

(우리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5 「“한반도가 외곽? 이걸 봐라” … 주한미군사령관 꺼낸 ‘거꾸로 지도」, 『중앙일보』, 2025.11.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53>).

# 일본의 21세기 지역질서 구상, FOIP

**석주희(石珠熙, Suk, Juhe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본 정치사회의 동학과 우익의 복원」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게이오대학 법학부에서 방문연구원,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일본의 영토·주권 문제, 내셔널리즘, 우경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다카이치 정권의 성립과 정치적 동학: 이념·정책네트워크·대중동원 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참정당의 약진과 우익 포퓰리즘」,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등이 있다.



## 들어가며

21세기 일본이 내세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은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적 공간으로 간주한 지역 질서 구상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FOIP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법치주의 등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와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 지역질서에서 수동적으로 ‘규칙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제시한 FOIP 구상은 단순한 지역 전략을 넘어 전후 일본 외교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재정립하는 핵심 외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케냐 방문 연설에서 언급된 이래,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공간을 설정했다. 이후 FOIP는 일본 외교의 핵심 비전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2019년 아세안이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FOIP와 협력을 추진해 나갔다.

FOIP는 규범과 가치 중심의 외교전략으로 출발하여 광범위한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미·중·러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 등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와 안보의 결합에서 정점을 이룬다. 초기 FOIP가 해양안보, 규범, 평화와 번영 등 가치 중심의 지역질서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다카이치 정권 이후에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 요소가 핵심축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반도체, AI, 양자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FOIP의 전략적 확장은 일본 내 보수·우경화 흐름과 결합되면서 주변

FOIP의 전략적 확장은 일본 내 보수·우경화 흐름과 결합되면서  
주변국의 경계와 우려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헌법 개정 논의, 자위대 역할의 확대,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의 경계와 우려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헌법 개정 논의, 자위대 역할의 확대,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FOIP가 표방하는 ‘자유롭고 열린’ 가치와 규범이 실제로는 전략적 경쟁과 안보 중심의 지역질서 재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를 내세운 기술 공급망 정책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배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OIP가 지향하는 포용성과 개방성의 가치와 상충된다. 즉, 초기 FOIP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강조하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했으나, 현재 FOIP는 일본 자국의 안보 강화와 결합된 지정학적 전략이 더욱 강조된다.

##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의 시작

2016년 8월, 아베 총리는 케냐에서 개최된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 기조연설에서 FOIP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점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소로 발전시키며 풍요롭게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sup>1</sup>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과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인도-태평양이 각국

1 外務省,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2016.

의 공식 문서에서도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일본은 『외교청서(外交靑書)』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명문화했으며, 해양안보 협력과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미국·호주·인도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명확히 드러냈다. 호주는 『외교정책백서(Foreign Policy White Paper)』에서 일본·미국·인도·한국·인도네시아와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질서, 혹은 억압적인 질서에 관한 지정학적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기존의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건국 이래 미국의 이익”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이어 2018년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 예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넓고 자유로운 바다를 무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다.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는 그 기초다. 이 바다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베 총리가 제창한 FOIP의 ‘세 기둥’으로 불리는 기본 원칙은 ①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개방성, ② 자유무역의 보급을 통한 경제적 번영 추구, ③ 평화와 안정의 확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인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법의 지배, 질 높은 인프라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우호관계, 경제연대협정(EPA)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물적·인적·제도적 개선 등 경제적 번영과 해상법, 해양상황파악(MDA) 강화, 인도적 지원, 재해 구조 등을 통한 지역질서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를 제시했다.

참가 대상에 대해서는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일본은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미크로네시아, 동티모

르, 케냐 등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태평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했다.

한편, 일본은 FOIP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적대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역내에서 확대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FOIP에서 내세운 ‘민주주의 보급’이나 ‘인권 존중’과 같은 이른바 ‘가치’ 요소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구분되는 차별화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FOIP도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 2019년 이후 FOIP의 다양한 갈래

일본은 2019년 『외교청서』에서 FOIP에 대해 기존의 ‘전략(strategy)’이 아닌 ‘구상(vi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배경에는 일본과 미국, 중국 간 경쟁의 심화에 따른 아세안 국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아세안도 이에 호응하여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최초의 공동 입장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만,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지역’을 강조했으며,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녔다.

다른 한편, 일본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2019년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일본·미국·호주·프랑스는 인도양에서 최초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호주는 영국, 미국과 함께 2021년 9월 AUKUS(Australis-UK-US)로 불리는 3국간 안보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1세기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호주, 미국, 영국 세 국가가 3자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게 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FOIP 진화'는  
아베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도, 경제안보와 헌법 개정 논의를 더하여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배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한편, 중국을 둘러싸고 국가 간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적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안보전략과 FOIP의 진화

2025년 10월에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은 강력한 보수주의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FOIP를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6년 5월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FOIP 10주년을 맞이하여 'FOIP 진화'를 내세우며 중점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첫째, 에너지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와 AI, 데이터 기반 경제생태계 구축, 둘째, 민간기술과 방위정책을 결합한 경제 프린티어 공동 창조와 규칙 공유, 셋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전보장 분야의 연계 확대다. 이를 위해 일본과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강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하여 "FOIP 실현을 향한 일본의 각오가 시험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FOIP 진화'는 아베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도, 경제안보와 헌법 개정 논의를 더하여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본은 FOIP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강화, 일본·아세안 AI 공동 창조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 해저케이블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FOIP 디지털 구상, CPTPP(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확대, 해양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및 ODA를 통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  
(2016. 8. 27.)

하노이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하는 다카이치 총리  
(2026. 5. 2.)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진화

출처: 外務省,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https://www.mofa.go.jp/mofaj/gaiko/page25\\_001766.html](https://www.mofa.go.jp/mofaj/gaiko/page25_001766.html)).

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sup>2</sup> 안보 분야에서는 ‘안보 3문서’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을 통해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처럼 일본이 군사력과 기술력 등 종합적인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운 ‘FOIP의 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나가며

21세기 일본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국가 관계와 개방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지역질서를 상정한다. FOIP는 미국, 호주, 아세안, 유럽 등을 포괄하는 협력을 전제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방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 같은 FOIP의 가치 지향성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역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물리며, 전략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조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신진 정치가 양성 기관으로 알려진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에 제시된 글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이 내세우는 FOIP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비전으로, ‘성숙한 일본 외교의 결정체’다. ... 일본의 전후는 자유 무역 아래 상호 풍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길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감과 실리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국제질서를 제안한다.<sup>3</sup>

2 外務省, 「高市総理大臣の外交政策スピーチ」, 2026. 5. 2.

3 斉藤竜貴, 2025,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共感と実利のFOIP2.0~」(2025.12.17.), 松下政経塾(<https://www.mskj.or.jp/thesis/47439.html>).

일본이 내세우는 FOIP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비전으로,  
 ‘성숙한 일본 외교의 결정체’다. … 일본의 전후는  
 자유무역 아래 상호 풍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길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감과 실리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국제질서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대 일본 보수정치의 산실로 불리는 마쓰시타 정경속도 FOIP를 ‘평화국가’ 노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며, 이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구상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은 표면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아시아 공동 번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제국주의 전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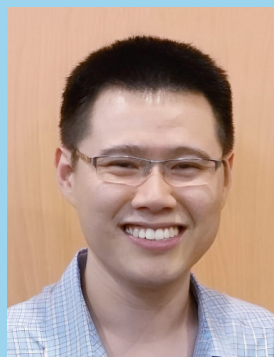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 헌법 개정 논의, 그리고 자위대 역할의 점진적 확대와도 관련된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안보와 군사전략의 결합은 안보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규범적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 2월 중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동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FOIP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자유롭고 열린’ 가치 및 규범의 실천과 일본 내 보수·우경화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간극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 러우전쟁 이후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

**퐁 치 끼엔(馮志堅, Phung Chi Kien)**

베트남국립대학교(VNU) 사회과학인문대학교(USSH)  
정치학부 정치학 강사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했다. 또한 2016년부터 VNU 산하 베트남 정치·법치·종교 연구그룹에서 학술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및 부처급 연구과제에 핵심 멤버로 참여해 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쌓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 특히 힘의 경쟁이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며, 비교정치학적·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들어가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국제 정세는 최근의 미-이란 충돌 같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서부터 미중 경쟁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간 비군사적 경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중대한 지정학적·전략적 변화를 초래하며,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역시 국내적으로 2024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가 발전 시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베트남의 지정학적 인식 역시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베트남공산당(CPV)의 지도 및 집권 아래, 2022년부터 전개된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 변화는 CPV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제13차(2021) 및 제14차(2026) 당대회 문건, 2025년 1월 24일 정치국(Politburo)의 대외통합 관련 결의 제59-NQ/TW, 그리고 이 시기 두 명의 당 총서기인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과 또 램(To Lam)의 주요 결의문, 대표 저작 및 연설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략 전환

베트남공산당 제13차 및 제14차 당대회의 주요 문서, 특히 두 당대회에서 발표된 정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전반적인 발전 비전이 “국가 발전에 대한 열망을 고취한다”는 단계에서 “국가 발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2030년, 2045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발전 목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13차 당대회는 21세기 중반까지의 베트남 발전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현대적 산업을 갖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저소득 수준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는 현대적 산업과 중상위 소득을 갖춘 개발도

베트남의 전반적인 발전 비전이 “국가 발전에 대한 열망을 고취한다”는 단계에서 “국가 발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2030년, 2045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발전 목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2026. 1. 20.)

출처: <https://baochinhphu.vn/thong-cao-bao-chi-phien-khai-mac-dai-hoi-dai-bieu-toan-quoc-lan-thu-xiv-cua-dang-102260120172530052.htm>

상국이 되며, 2045년까지는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제13차 당 대회의 목표를 바탕으로, 제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새로운 발전의 시대, 즉 ‘국가 도약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실제로 베트남공산당은 2021~2025년까지의 시기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 준비 단계로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2024년 7월 사망한 응우옌 푸 쯩 총서기를 대신하여, 2024년 8월 초부터 당 수장이 된 또 럽 총서기의

2025-2030-2045 목표 체계에서 첫 번째 목표를  
2025년 말까지 달성한 뒤, 21세기 중반까지 지역 및 세계 질서에서  
중견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또 럽은 집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8월 22일,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 40주년 중앙회의에서 “새로운 맥락은 베트남 민족의 신기원(新紀元)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국가 발전의 시대’ 개념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이 개념은 또 럽의 2024년 9월 23일 컬럼비아대학교 연설과 그해 10월 31일 및 11월 25일 호찌민 국가정치아카데미 연설 등 주요 행사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감한 지도이념은 2024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베트남의 주요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제14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베트남이 지역 및 세계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제13차 및 제14차 베트남공산당 당대회에서 설정된 발전 로드맵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언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 목표는 베트남이 2025-2030-2045 목표 체계에서 첫 번째 목표를 2025년 말까지 달성한 뒤, 21세기 중반까지 지역 및 세계 질서에서 중견국(middle power)의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4차 당대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5,026달러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 그룹에 진입했다. 이러한 초기 성과는 다른 지정전략적 노력과 결합하여 국가 종합 국력의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고 베트남이 중견국으로 빠르

게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다.<sup>1</sup>

지정학적 측면을 더 깊이 살펴보면, 세계 및 지역 질서에 대한 베트남의 현재 비전은 두 기본 개념, 즉 ‘세계 국면(cục diện thế giới)’과 ‘세계 질서(trật tự thế giới)’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국면은 ‘특정 시기 세계 질서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단기적으로 베트남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극화의 개방성, 새로운 권력 중심들의 점진적 출현,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격화되는 경쟁을 수용하는 쪽에 더 가깝다. 제13차 당대회가 세계 정세를 다극화·다중심화(multi-centric) 추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간략히 서술하고, 핵심 행위자로 ‘강대국들’만을 언급한 데 반해, 제14차 당대회는 ‘권력 중심들’의 중요한 역할을 추가로 제시하고, 핵심 행위자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세계 정세는 다극화, 다중심화, 다층화, 파편화, 그리고 이질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그리고 전례 없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 강대국들과 권력 중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략을 조정할 것이며,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타협하기도 하겠지만,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다. 갈등, 전쟁, 그리고 첨단기술 군비 경쟁이 많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고, 대규모 전쟁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sup>3</sup>

1 Tran Khanh, *Vietnam's Geostrategic Vision 2030: Theoretical, Practical Issues and Policy Adaptations*,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2024, p.415.

2 Nguyen Viet Thao, “Formative Context and Salient Features of the Current World Conjuncture,” *Journal of Political Theory*, 541, 2023, pp.148~151.

3 Communist Party of Vietnam, *Documents of the XIV National Congress*, vol. I,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2026, p.77.

제14차 당대회는 공정성, 평등성, 상호 이익, 국제법 기반이라는 특징을 포괄하는 미래 세계 및 지역 질서에 대한 베트남의 비전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사고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국가 건설 강령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제11차(2011), 제12차(2016), 제13차 당대회 문건에서는 세계 및 지역 질서에 대한 공식적인 비전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공산당 제13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축과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제14차 당대회는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인식을 제시했다. 우선 제14차 당대회는 지정학적 경쟁을 국제정치의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직접 언급했다. 아울러 병력 동원, 글로벌 안보 문제, 군사 기술 변화, 여러 지역에서의 전쟁과 분쟁 등 일련의 다른 지정학적 요소들이 기존 세계 질서의 약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과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현재와 미래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기회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평화와 협력의 거대한 흐름, 제4차 산업혁명,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법에 기반한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 및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sup>4</sup>

이러한 천명을 통해 제14차 당대회는 공정성, 평등성, 상호 이익, 국제법 기반이라는 특징을 포괄하는 미래 세계 및 지역 질서에 대한 베트남의 비전을 명

<sup>4</sup> Communist Party of Vietnam, *Documents of the XIII National Congress*, vol. 1,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2021, p.120.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14차 당대회가 처음으로 인도양을 베트남 지정전략 사고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인도양은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당 문건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 혹은 ‘아시아-태평양-인도양 지역’이라는 더 넓은 지역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확히 드러냈다. 이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사고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국가 건설 강령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제11차(2011), 제12차(2016), 제13차 당대회 문건에서는 세계 및 지역 질서에 대한 공식적인 비전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지정학적 사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국가 이익과 관련된 핵심 지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공산당 제13차 및 제14차 당대회의 공통된 중요한 특징은 동남아시아와 메콩 지역을 포함하고 ASEAN과 APEC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베트남의 ‘우선지역’으로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14차 당대회가 처음으로 인도양을 베트남 지정전략 사고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인도양은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당 문건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 혹은 ‘아시아-태평양-인도양 지역’이라는 더 넓은 지역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경학적·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의 핵심지역이자 불안정 요소를 내포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5 Communist Party of Vietnam, *Documents of the XIV National Congress*, vol. 1,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2026, p.242.



현재 베트남공산당 총서기인 또 림(왼쪽)과 전 총서기 응우옌 푸 쩡(오른쪽)  
(2023. 1. 19.)

출처: [https://congan.com.vn/tin-chinh/lanh-dao-bo-cong-an-tham-chuc-tet-tong-bi-thu-nguyen-phu-trong\\_142674.html](https://congan.com.vn/tin-chinh/lanh-dao-bo-cong-an-tham-chuc-tet-tong-bi-thu-nguyen-phu-trong_142674.html)

이러한 확장은 제14차 당대회가 남중국해(동해) 분쟁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분쟁과 한반도 긴장까지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험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이러한 베트남의 전략 변화는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공산당의 실용주의가 강화되었음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5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확인되듯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공간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접근을 수용하지 않고 공식 문서와 국제 포럼에서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상기 분석이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베트남이 전략적 군사·정치 권력의 분포를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향후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과 국제적 위치에서 나타나는 깊이와 범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와 유사한 변화는 베트남이 자신의 글로벌 및 지역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응우옌 푸 쩡이 발전시킨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개념은 제13차 당대회 이후 그의 사망 시점까지 베트남공산당과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당대회 문건에 공

##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과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은, ‘참여하고 가담하는’ 단계에서 ‘구축하고 형성하는’ 단계로의 전환과 맞닿아 있다. 또한 여러 국제 문제에서 ‘핵심적·선도적·주도적·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려는 요구와 연결되며, 베트남이 지정학적 지도에서 더 높은 위상을 확보하려는 열망과도 일관성을 보여준다.

식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다. 반면 또 럽이 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에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개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제14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그의 정치 보고서 제목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또한 2026년 2월 20일 또 럽이 발표한 「새로운 수준에서의 포괄적 대외정책 추진」이라는 글에서도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개념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글은 제14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 대외정책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니며, 여기에서는 대신 ‘자율성’이 새로운 시대 대외정책의 기초임이 계속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응우옌 푸 쯙의 ‘대나무 외교’ 유산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과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은, ‘참여하고 가담하는’ 단계에서 ‘구축하고 형성하는’ 단계로의 전환과 맞닿아 있다. 또한 여러 국제 문제에서 ‘핵심적·선도적·주도적·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려는 요구와 연결되며, 베트남이 지정학적 지도에서 더 높은 위상을 확보하려는 열망과도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는 결의 제59-NQ/TW에서 제시되었고, 이후 제14차 당대회에서 재확인되었다.

제13차 당대회에서 제14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 베트남은 국가 방위·안보 및 대외정책에 대한 지정전략적 사고에서 ‘파트너-대상(đối tác-đối tượng)’ 접근법과 ‘네 가지 불가 정책(Four Nos Policy)’을 핵심 원칙으로 일관되게 유지했다. 특히 제14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공산당이 대외정책과 국제 통합을 국가 방위 및 안보와 동등한 수준의 ‘중요하고 상시적인 과제’로 처음 규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제13차 당대회는 ‘전략적 동

반자 관계'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만을 언급했다. 반면, 제14차 당대회는 처음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베트남의 파트너십 위계에서 최상위에 위치시켰다.

##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략 실행 양상

베트남이 지역 및 세계의 지정학적 안정성에 대응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전략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세계 및 지역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국가 역량, 즉 경성 및 연성 권력을 강화하고 확립하려는 '전략적 자율성'의 정신은 베트남의 민간 및 군사 발전 노력 모두에서 강력하고 긴급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국가 발전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 모델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사 분야에서도 뚜렷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초 이후 베트남의 공식 국방비 지출 자료는 2018년 말까지만 공개되어 있지만,<sup>6</sup> 여러 국제 보고서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도 베트남이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적지 않다. 베트남은 이러한 노력을 국내외에 숨기지 않고, 2025년 '통일 50주년' 행사와 '독립 80주년' 행사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역사적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최신 군사 장비와 역량 강화의 성과를 연속적으로 공개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보면, 2022년 이후 주요 행위자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관련해 베트남이 보여준 국가적 행위는 '비동맹', '전략적 자율성', '보다 주도적'이라는 국가 지정학적 인식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낸다. 베트남은 UN, ASEAN,

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dget", n.d.  
(<https://www.mod.gov.vn/home/intro/detail?1dmy&current=true&urile=cm%3apath%3a/mod/sa-mod-site/sa-qpv/sa-qpv/sa-qpv-bqp-root/sa-qpv-gt/a9ebd82c-c152-4649-9a66-ecdbfba8d457>)



2025년 9월 2일 독립 80주년 행사에서 비엠텔(베트남 군산업·통신그룹)이 연구·개발·현대화한 방공 미사일시스템을 선보였다.

출처: <https://media.chinhphu.vn/chum-anh-uy-luc-trang-thiet-bi-khi-tai-cua-quan-doi-nhan-dan-vietnam-tai-a80-102250901224935792.htm>

APEC 등 국제기구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들의 세력 동원 압력 속에서도 파트너십의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지역 및 세계의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관계,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이는 제14차 당대회의 인식과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기존에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22년 이후 한국(2022. 12.), 미국(2023. 9.), 일본(2023. 11.), 호주(2024. 3.), 프랑스(2024. 10.), 말레이시아(2024. 11.), 뉴질랜드(2025. 2.), 인도네시아(2025. 3.), 싱가포르(2025. 3.), 태국(2025. 5.), 영국(2025. 10.), 유엔(2026. 1.) 등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연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트남이 유엔 193개 회원국을 포함한 195개국과 공식 외



2025년 10월 30일 APEC 정상회의 주간예 르엉 끄엥(Luong Cuong) 베트남 당시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다.

출처: <https://www.president.go.kr/photos/president/11iXnUog>

교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 지정학적 지역의 강대국 및 핵심 행위자를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표적인 지정학적 사안에 대한 대응에서도 베트남은 유사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 채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보장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 및 기타 극단적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2022년 이후 모든 주요 지역적 사안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중 전략 경쟁, 미-이란 충돌,

국제 무역 긴장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사안에서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 긴장, 대만 문제 등 지역 및 하위 지역 차원의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인접 국가인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를 항상 우선시해 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는 또 럽 총서기가 취임 직후인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하고, 2026년 2월 라오스를 방문한 데 이어, 인도차이나 3국 공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일정을 들 수 있다.

## 나가며

이 글은 필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략 인식과 실행의 핵심을 규명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 발전의 신시대’로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중반까지 중견국 지위를 달성하려는 베트남의 장기적 목표를 함의한다. 구체적인 지정전략학적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에서 아시아-태평양-인도양으로 지정학적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트너-대상’ 접근과 ‘네 가지 불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세계 강대국 및 주요 지역 행위자들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교 네트워크를 비약적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국내적 노력과 병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제 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촉구하는 입장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견국 수준으로 국가 역량과 위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체적 목표에서 비롯된다. 베트남공산당은 제13차 당대회 이후 국민에게 새로운 발전 시대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고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이란 충돌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견국 수준으로 국가 역량과  
위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체적 목표에서 비롯된다.

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위기와 같은 세계 지정학적 환경의 심각한 불안정성은 2026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베트남의 구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지역 국가인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록 한국과 달리 국경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인 핵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남중국해 분쟁,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의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 등의 문제는 향후 베트남에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은 베트남의 지정학 전략 중 가장 두드러지고 최신의 측면을 일반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격화되는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최근 주요 국제 분쟁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경 주변의 지정학적 위협 및 분쟁 해결 경험 등 구체적인 지정학적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세계 및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에 잠재적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예비적 조사 결과는 특히 베트남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체험! 역사현장

# 유엔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참관기

## 식민지 범죄, ‘위안부’ 제도, 그리고 중일 대립

**손성숙(孫成淑, Sung Sohn)**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의 전직 이중언어 교사로, 1994년 북가주 공립학교 최초이자 유일한 한/영 이중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Korean/English Two-Way Immersion Program)을 개설했다. 2017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 사회정의교육재단(ESJF)을 공동 설립하여 현재까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2023년부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가진 NGO 대표로서 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여성 카커스(US Women's Caucus)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국장을 맡고 있다.



##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로 유엔 회의에 참가하다

2026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인도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전권대사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심사를 거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가진 NGO 중 초청된 단체로 제한되었는데, 사회정의교육재단(ESJF)은 이번 회의에 초청된 117개 NGO 중 하나였다.<sup>1</sup>

필자는 라마이투스 오로니(Ramaytush Ohlone) 선주민 부족이 조상 대대로 거주해 온 영토인 샌프란시스코에서 2017년에 ESJF를 공동 설립했으며, 이후 대표로 재직해 왔다. ESJF는 2023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를 지닌 NGO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재단의 미션은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난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분야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저지,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유산 보존, 그리고 역사를 바꾼 풀뿌리 운동 조명 등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째, 올해 1월 회의 첫날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Trusteeship Council Chamber)에서 진행된 중일 양국 간의 토론과 그 배경 및 시사점을 다룬다. 둘째, 반인도범죄독립협약의 개요와 역사, 그리고 더욱 포용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며 책임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명한다.

1 유엔 총회, “Information for Participation of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First Session, 2026([https://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cah/prepcom\\_1sess/ngos.pdf](https://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cah/prepcom_1sess/ngos.pdf)).



유엔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출처: <https://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cah/prepcom.shtml>

## 유엔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

###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1월 19일 첫날 아일랜드의 데클란 스미스(Declan Smyth) 준비위원회 의장이 주재한 회의의 오후 세션에서,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인 썬 레이(Sun Lei) 대사는 1930~1940년대 일본의 전쟁범죄와 그 영향에 대한 언급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다음은 유엔 웹TV 녹화본에 기초한 영문 기록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sup>2</sup> 다음은 썬 레이 대사의 발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인에게 깊은 재앙을 안겼습니다. 올해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이 시작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판소는 중국 및 여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을 계획, 준비, 실행한 일본 군국주의의 죄상과 태평양전쟁 도발 책임을 체계적으로 심판하고 폭로했습니다.

<sup>2</sup>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유엔 총회 오후 본회의,” UN Web TV, 2026년 1월 19일. 당시 설전 상황을 신속히 제보해준 국제여성연합(IAW) 유엔 수석대표 질 팔로우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필자는 일정 제약으로 유엔 본부에 늦게 도착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덕분에 언론 보도에 앞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 모습**

1952년 덴마크 건축가 핀 율(Finn Juhl)이 설계한 이 회의장은 상징적인 말발굽 형태의 좌석 배치를 통해 민주적 평등을 형상화했다. 이곳은 현재 유엔에서 국제회의와 NGO 포럼이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주요 장소 중 하나다. 스크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데클란 스미스 의장이다.

출처: 사회정의교육재단

그는 이어서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도쿄재판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결과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하며,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이 과거의 해로운 군국주의 길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이부치 히토미(Kaibuchi Hitomi) 일본 수석대표는 준비해온 글을 읽은 후 중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은 반인도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고도의 요약이자 정확한 묘사입니다.”

중국 대표부가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 애호 국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무수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역사에 관한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후 열린 답변권 회의에서 주유엔 중국대표부의 리 린린(Li Linlin) 수석법률 고문은 ‘위안부’ 역사와 도쿄재판이 단순히 역사적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반인도범죄협약 초안의 핵심적인 법적 선례임을 명시했다. 그의 반박문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금 일본 대표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했으나,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인도범죄라는 개념은 국제 재판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을 언급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은 반인도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고도의 요약이자 정확한 묘사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중국에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고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습니다. 이는 반인도범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 측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룬다고 했으나, 그들이 역사, 특히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유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잘못된 언행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위험한 경향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적 증거를 직시하고 죄상을 깊이 반성하여,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일본 측은 이에 반해 “중국대표부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의 입장은 이전 발언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짧게 대응했다.

### 예측된 중일 간 마찰과 역설적 기회

준비위원회에서 발생한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2025년 11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중국(대만) 관련 발언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 중 중국(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위권 발동에 따른 군사행동의 근거를 시사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불만을 표명했다. 참고로 유엔 내에서 대만의 공식 명칭은 ‘Taiwan, Province of China’로 표기된다.

2025년 말부터 이어진 유엔 내 외교적 긴장을 고려할 때, 반인도범죄 준비위원회에서 일어난 양측의 공방은 예견된 수순이나 전개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엔에서의 공방은 2025년 11월 18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11월 21일 주유엔 중국대사 푸 총(Fu Cong)은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무력 개입도 ‘침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1월 24일 대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식 반박문을 제출했다. 외교적 설전은 12월 내내 격화되었으며, 12월 15일 안보리 공개토론에서 푸 총 대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부활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두 달 뒤인 3월 6일에는 16명의 유엔 전문가들이 유엔 제네바 사무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공동성명을 내었다. 이 공동성명은 오랜 세월 지연되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 문제에 대해 깊은

피해자 서사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본질이 피해자 중심의 정의 구현이 아닌  
국가 이익 추구로 변질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면제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생산적인 ‘사법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려를 전하며, 이제는 관련 국가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하기를 촉구한 것이다.<sup>3</sup>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국가 주도의 일본군‘위안부’ 제도라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진 인권에 반하는 폭력이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일 사이에 벌어진 외교적 마찰의 배경에는 지역 안보 및 중국(대만) 지위에 관해 일본 총리가 한 발언으로 촉발된 측면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서사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본질이 피해자 중심의 정의 구현이 아닌 국가 이익 추구로 변질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생산적인 ‘사법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과거의 참혹한 역사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철저한 해결 없이는 현재와 미래의 정의 또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둘러싼 반인도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넓은 발판으로 삼고, 다자간의 노력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Justice, truth and reparations long overdue for survivors of so-called ‘comfort women’ system: UN expert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6. 3. 6.

## 반인도범죄협약의 역사

1998년에 로마규정이 생겨 반인도범죄(CAH: Crimes Against Humanity Treaty)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는 반인도범죄에 관한 정의는 파편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반인도범죄가 특정 분쟁에 국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로마규정은 제7조를 통해 반인도범죄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범해진 열한 가지 금지 행위’로 규정하며, 최초의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조를 참조하기 바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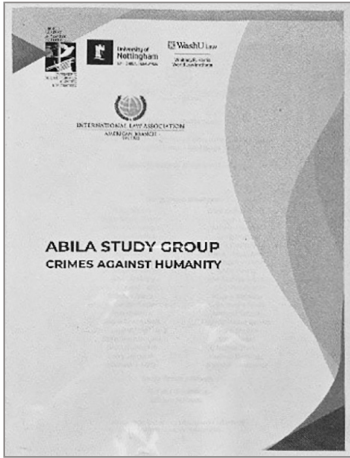
열한 가지 금지 행위는 간략하게 추리면, 살인, 절멸, 노예화, 감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광범위한 성폭력(강간, 성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등 포함), 추방 또는 인구 강제 이주, 특정 집단(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젠더 등)에 대한 박해, 강제 실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범죄, 그리고 기타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다. 아울러 유엔은 반인도범죄가 집단 학살(genocide)과 마찬가지로 무력 분쟁과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평화 시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로마규정은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 국가 간 집행, 국가 차원의 책임 추궁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유엔과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반인도범죄협약 제정을 위한 협업을 구축해 왔다. 다음은 그 노력의 주요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 유엔의 노력

유엔은 지난 10년 동안 독자적인 협약 제정을 위한 법적 설계를 진행해 왔다. 2014년 손 머피(Sean D. Murphy)를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초안 작성

4 유엔 총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1998. 7. 17. (<https://www.icc-cpi.int/resource-library/Documents/RS-Eng.pdf>).



40명의 ABILA(Americ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국제 연구 그룹원이 작성한 이 페이퍼는 ILC(국제법위원회)의 2019년 초안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2026년 1월에 열린 준비위원회 당시 ‘반인도범죄에 관한 협약 연대(Coalition for a Convention on Crimes Against Humanity)’가 더욱 강력한 조약 체계를 옹호하고 제안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출처: 사회정의교육재단

을 시작했으며, 국제법위원회(ILC)는 2015~2017년 1차 검토를 마쳤다. 2019년 5월, ILC는 2차 검토를 통해 최종 법률 내용을 확정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2024년 12월 4일, 유엔 총회 결의안 79/122가 통과됨에 따라 ‘전권대사 외교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준비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 시민사회의 노력

시민사회는 이 과정을 추동하는 또 다른 핵심 동력의 축이었다. 특히 2025년 결성된 반인도범죄협약을 위한 연대(C-CAH) 단체는 협약을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레일라 사다트(Leila Sadat)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U) 법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 연대에는 국제앰네스티(AI),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정안 제안과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정의교육재단도 이 단체의 구성원이다.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7년 4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협약 최종 타결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다.

독립적이고 포용적이고 범죄 예방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인도범죄협약의 제정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제적 도구로서 모든 이들이, 특히 미래 세대가 인류애가 보장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구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국제적 토대가 될 것이다.

### 한국 '위안부' 소송 결과에 반영된 국제법의 변화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국가 면제'였다. 국가 면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독립적인 반인도범죄협약이 제정된다면, 피해자들은 '면제의 장벽 내지 간극'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적 변화의 중요성은 최근 한국의 '위안부' 소송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기념비적인 판결(제1차 '위안부'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국가 면제가 반인도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일본 정부에 성노예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당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일본 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이어 2023년 11월 23일, 제2차 '위안부'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우선시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 면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국제관습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0년이 넘는 이 법적 투쟁은 2023년 12월 9일 최종 확정되었다.

2026년 4월 현재, 한국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가 단 다섯 명뿐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승리는 이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국가 면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 승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반인도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 수 있고, 각 국가가 이를 열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립적이고 포용적이고 범죄 예방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인도범죄협약의 제정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제적 도구로서 모든 이들이, 특히 미래 세대가 인류애가 보장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구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국제적 토대가 될 것이다.

# 시공간을 좁아웃해야 비로소 보이는 본질

##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토크

**박정애(朴貞愛, Park, Junga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99년부터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연구, 문제해결 운동을 해왔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여성사를 전공하고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식민주의와 젠더, 인종, 민족, 계급 차별의 중층 구조에서 가장 저변에 놓였던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가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를 썼으며, 최근에는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썼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군‘위안부’ 담론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를 직시하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종의 학문적 성찰의 장이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북토크 〈지속되는 폭력, 연결된 목소리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열렸다. 재단의 연구총서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접속한 연구자들이 한 화면에 모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를 되돌아보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던지는 자리였다.

행사는 1부 필자 발표와 2부 라운드테이블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사회는 함예재(동북아역사재단), 2부 사회는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이 맡았다. 그러나 이날의 분위기를 단순히 ‘신간 소개 행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품어 온 문제의식이 이날 행사의 곳곳에 배어 있었고, 필자들과 토론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그 문제의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히려 이날 행사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군‘위안부’ 담론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를 직시하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종의 학문적 성찰의 장이었다.

## 왜 지금, 이 책인가

필자가 이 책을 기획한 배경에는 초조함이 있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듭 호소해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공론장에서는 충분히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었다. 피해자의 경험을 공격하는 역사부정론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데, 정작 이 문제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 원인을 필자들과 함께 찾아가다 보니, 오랫동안 공론장을 지배해온 하나의 구도가 눈에 들어왔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발간 기념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토크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지속되는 폭력, 연결된 목소리들

2026. 3. 27(금)

🕒 14:00-18:00

📍 온라인 줌

사전신청자에게 줌 주소 발송  
신청 <https://bit.ly/4sSsZGT>



제1부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쓰다

14:00~14:15

사회: 함예재(동북아역사재단)

각각의 접근이 도달하는 곳:

보편적 여성 인권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14:20~14:35

'가라유키상'으로부터

다케모토 니나(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14:40~14:55

식민주의 성관리 정책으로부터

하야시 요코(나고야대 젠더다이버시티연구소)

15:00~15:15

전시와 평시 성폭력'문화'로부터

장수희(동아대)

15:20~15:35

일본의 역사 연구로부터

후지메 유키(오사카대)

15:40~15:55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연구로부터

백재예(메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제2부 라운드테이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16:1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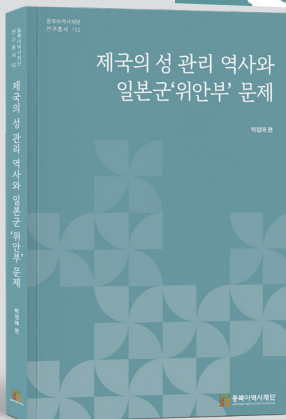
사회: 전영옥(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김은경(한성대), 홍양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이아리(동북아역사재단), 현명호(동북아역사재단)

<모든 참가자 토론>



북토크 프로그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듭 호소해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공론장에서는  
충분히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었다.  
피해자의 경험을 공격하는 역사부정론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데,  
정작 이 문제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위안부는 매춘부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역사부정론의 공세에 맞서, 공론장은 오랫동안 ‘위안부≠공창’이라는 구도 위에서 피해를 방어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은 바로 그 방어 논리 자체가 잘못된 전제, 곧 ‘공창제’에 대한 왜곡된 통념 위에서 있다고 비판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애초부터 설정한 ‘공창제’라는 모호한 용어정치에 휘말려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를 심분 활용한 역사부정론자의 프레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정작 제국 일본의 성 관리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시야가 좁아져 버린 것이다.

‘공창제’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합법이든 비법이든 공공연한 성 관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는 ‘공창제다’, ‘공창제가 아니다’를 오가는 비일관적 태도를 취해 왔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법적 면허를 가진 창기뿐 아니라 예기·작부·여급 등 비면허 여성들까지 강제적 성병 검진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 권력은 ‘합법’과 ‘비법(非法)’의 경계 자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했으며,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그 체계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공창제’라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피하고, ‘제국의 성 관리 정책’이라는 더욱 정확한 개념 틀 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 이름은 달리해도, 구조는 하나였다

이날 행사에서 반복된 주제는,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며 성착취 또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왔던 여성들이 사실상 하나의 구조 안에 놓여 있었다는 인식이었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지점이기도 하다. 19세기 말의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 식민주의에 기반한 제국의 성 관리 체제 아래 놓인 여성들,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일본군‘위안부’, 그리고 전후 미군‘위안부’까지, 이들을 가르는 것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때마다 달리 붙여진 이름뿐이었다. 그 이름 뒤에 동일한 구조가 놓여 있었다.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성적 위안’을 위해 여성의 몸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통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들은 언제나 가부장제의 지배와 식민지적 차별 구조, 그리고 계급적 취약성 위에서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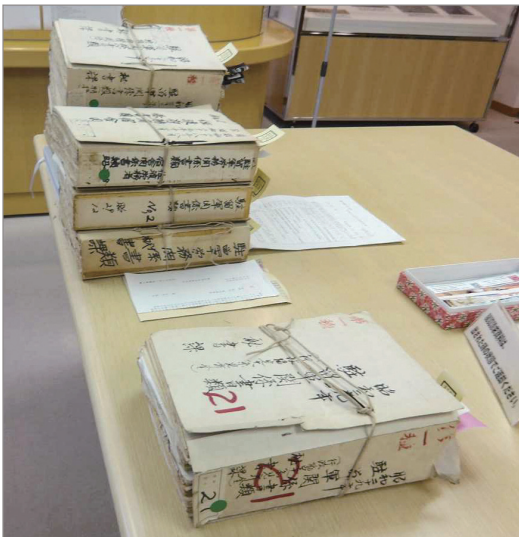
다케모토 니나(嶽本新奈,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소)는 ‘가라유키상’의 이야기로 부터 이 구조를 풀어나갔다. ‘가라유키상’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주로 규슈 북서부 출신의 가난한 여성들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등지로 건너가 성매매업에 놓인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오롯이 타인의 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그런데 다케모토는 그 기록을 남긴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식민주의적 편견을 투영하고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사자 여성들이 일본인 남성 고객을 가장 불쾌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기억했음에도, 기록자들은 ‘외국인 남성’을 더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전제하며 그 증언을 왜곡하거나 외면했다. 이 ‘듣기의 실패’ 속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구조가 숨어 있다. 가라유키상들은 일본 제국의 해외 팽창 논리 속에서 남성 이주자들의 ‘위안’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같은 당대의 주류 지식인조차 이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가라유키상의 존재는 단순히 개별 여성들의 비극이 아니라, 이후 일본군‘위안부’ 제도로 이어지는 국가 성 관리 체제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야시 요코(林葉子, 나고야대학 젠더다이버시티연구소, 현재 가쿠슈인대학 문학부)는

제국의 성 관리 정책이 확대될수록 ‘위생 리스크’는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으며, 일본군의 군사적 팽창과 ‘위안소’의 확산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원형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근대 일본의 성 관리 정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성 관리 방식을 이식하고 변용한 것이었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일본의 점령지가 된 중국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서 군의관이 현지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병검사를 실시한 것이 일본군 위안소 설치의 가장 이른 사례다. 여기서 핵심은, 성 관리의 대상이 일본인 여성이 아니라 점령지 현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제국의 성 관리 정책이 확대될수록 ‘위생 리스크’는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으며, 일본군의 군사적 팽창과 ‘위안소’의 확산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오사카대학)는 전후 일본에서 점령군 미군을 위해 운영된 ‘특수 위안시설’이 전전(戰前)의



전후 니가타현에서 작성된 경찰 관련 공문 서철에는 미군 점령기에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위안’시설의 설립은 “전쟁 종결에 따라 위안오락시설을 전쟁 전으로 복귀시킨다”는 주체적인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출처: 후지메 유키 제공

성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전전에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출범했음을 보여주었다. 곧 전전의 ‘공창제’ 또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미군‘위안부’ 제도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확인된 니가타(新潟)현 공문서는 미군 주둔 기간 강간과 폭행 등의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철저히 은폐되었는지 시사한다. 전쟁의 이름이 바뀌고, 주둔하는 군대가 바뀌었을 뿐, 여성의 몸을 국가와 군대의 필요에 따라 배치하는 논리는 그대로였다. 이날 후지메는 “제국의 성 관리와 군‘위안부’는 제국이 계속되는 한 이름과 얼굴을 바꾸어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21세기의 ‘탈제국 페미니즘’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를 촉구했다.

###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

장수희(동아대학교)는 이 구조가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어 폭력을 ‘보통의 일’로 만들어 왔는지 짚었다. 전시 성폭력과 전후 성폭력 ‘문화’의 연속성을 주제로, 문학 작품과 증언기록을 교차하며 폭력의 ‘인지 불가능성’을 분석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화’라는 이름 아래 ‘기생 관광’, 술자리 접대, 성 산업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이것이 폭력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재발 방지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영미권의 전시 성폭력 연구를 분석한 백재예(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는 또 다른 차원의 ‘인지 불가능성’을 제기했다. 2000년대 이후 영미권 학계에서 전시 성폭력 연구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담론이 확장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맥락을 잃고 주변부로 밀려났다. 영미권 연구는 주로 1980년대 이후의 분쟁에 집중하면서, 그 배경이 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구조적 맥락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현대 내전의 성폭력과 유형적 유사성만을 공유하는 단절된 역사 사례로 단순화되곤 한다. 백재예는 이 ‘맥락의 누락’이 피해생존자들이 수십 년에 걸친 법적 투쟁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해 온 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지는 가해 구조와 반복되는 피해

2부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은경(한성대학교), 홍양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이아리(동북아역사재단), 현명호(동북아역사재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이 책의 논점을 함께 짚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린 자리였다. 기대 이상으로 날카롭고 풍성한 토론이 이어졌다.

홍양희는 이 책이 ‘위안부≠공창’이라는 주류 담론 안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내재해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 민족주의 패러다임에서 생산되어온 여성 내부의 차별적 질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면서도 일상적 성폭력에는 무감각한 모순, 일본인‘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이 민족주의적 시각 속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김은경은 공창제를 단순한 합법 또는 비법의 문제가 아니라 “비합법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하는 정책”으로 재정의한 이 책의 시각에 공감을 표하면서, ‘목인’이라는 용어가 제도의 창설자인 국가의 역할을 비가시화한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원아는 ‘제국의 성 관리’ 구조를 논할 때 일본 본토로부터 식민지와 점령지로 향하는 일방향적 시각을 경계하며, 식민지에서 일본 본토로, 또 여러 방향으로 얽혀 이동한 여성들의 존재를 분석의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아리는 이 책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가장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평가하면서, ‘위안부’를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탈적 사례로 박제화하려는 경향을 경계했다. 현명호는 제국의 성 관리 체제가 일본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구조임을 짚으면서, 전전과 전후, 그리고 냉전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군사주의와 성폭력 구조의 연속성을 물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 참전 과정에서 자행된 성폭력, 미군 기지촌 문제가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위안부’ 관련 담론이 앞으로도 얼마나 깊은 사유와 부지런함을 요구하는지 각성케 하였다.

과거를 말하는 자리였지만,  
그 말은 분명히 지금 이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세계를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연결을 가시화하는 일

4시간의 행사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하나의 물음이 남았다. ‘지속되는 폭력’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이 책이, 그리고 이날 행사가 탐색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국가 성 관리 체제 아래 고통받은 여성들이 ‘가라유키상’이든, 일본 식민지 또는 점령지의 예기·작부든, 일본군‘위안부’든, 전후 미군‘위안부’든, 그들을 가르는 이름과 시대의 경계를 허물고 그 연결을 가시화하는 일이 출발점일 것이다. 이름과 얼굴이 달랐을 뿐, 이들이 공유한 것은 가부장제와 식민지적 차별, 빈곤, 그리고 전쟁과 군사주의 속에서 ‘도구’로 소비된 몸이었다. 그 연결을 보지 않고 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논의도 절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준비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자주 떠올린 것도 바로 그 연결이었다. 시공간을 가로질러 얼굴을 바꿔 가며 반복된 폭력의 구조를 함께 드러낼 때, 비로소 ‘위안부’라는 키워드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는 닿을 수 없었던 문제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날 후지메 유키는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믿으며, ‘성 관리나 여성 동원의 정도가 덜한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그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필자는 “차별 구조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의 서사가 재구성될 때, 여성 인권은 비로소 ‘보편’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날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과거를 말하는 자리였지만, 그 말은 분명히 지금 이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세계를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WAM이 만든 일본군 위안소 지도. 15년간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개설되었던 위안소의 성격은 시기마다, 지역마다, 지역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달랐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제국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호칭의 성 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출처: 일본 여성을 위한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웹사이트

NAHF 톨아보기

# 한중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

## 제2회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

**홍문기(洪文基, Hong, Munki)**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에서 나타나는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교육이 한국의 '당사자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 들어가며

지난 4월 23일 진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작년 겨울이었다. 마침 제주도에서 가족여행 중이었던 터라 모슬포항에서 대방어를 시켜놓고 한 젓가락 뜨려는데 전화를 받았다. 받아 보니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연구소의 우성민 선생님이었고, 한중 교과서 포럼에서 발표해보겠냐는 제안이었다. 15분 정도의 통화 후 기쁘게 승낙하고 식사 자리로 돌아와 보니 대뱃살이 전부 없어져 버렸던 가슴 아픈 기억이 난다.

## 발표자로서의 문제의식

내가 제안받은 세부 주제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교과서 분석이었다. 마침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청일전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몇 편의 연구를 해왔던 터라 내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청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



제2회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술과 한중 역사인식 대화' 단체사진

청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이 되었다는 것 외에  
이 전쟁의 역사에서 한국의 지분은 없다.

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戰場)이 되었다는 것 외에 이 전쟁의 역사에서 한국의 지분은 없다.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을 근대 일본의 명실상부한 출발로 기억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을 양무운동이 실패하고 변법자강운동으로 이행하는 계기로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사 연구 및 교육에서 청일전쟁은, 약간 과장하자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이자 갑오개혁의 원인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된 두 가지 변혁 사이에 ‘끼어 있는’ 연결점에 불과하다. 이번 발표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아예 청일전쟁을 독립적으로 다룬 챕터 자체가 없고 관련 내용이 동학농민운동에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분석한 『동아시아 역사기행』 교과서에서도, 청일전쟁 당시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기행』 교과서는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 국가의 주민들이 침략전쟁에 맞서 각자 어떻게 저항했고 연대했는지를 강조하려고 했다고 교육과정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친일개화파 정부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이후 한국에서 저항의 주체는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한 농민 집단들이었음에도, 이들이 싸우고 학살당한 역사를 제대로 다룬 교과서는 없었다. 나아가 청일전쟁 중 각국에서 나타난 침략과 저항의 경험을 함께 포착해내면서 갈등의 극복을 함께 모색하는 역사교육을 제안하는 것이 이 발표의 핵심 요지였다.

## 발표 당일의 풍경

얼기설기 만든 발표문을 보내고 어느덧 포럼 당일인 4월 23일이 되었다. 원래 포럼의 개최 예정일은 3월 말이었지만, 중국 발표자들이 본국 사정으로 출국이 지연되어 4월 말로 연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성민 선생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분들의 노고는 말도 못했을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표 당일 재단 대회의실에 찾아갔을 때, 다른 발표자 및 토론자와 대면하고 인사를 나눴다. 학부 시절에 수업을 듣기도 했던 박지향 이사장님과, 재단에 재직하고 계신 선후배 연구자들을 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한국 연구자들이야 모두 아는 분들이었지만, 원래 중국 학계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던 터라 중국 측 발표자들과는 전부 초면이었다. 발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 발표 주제와 참석자

1	청일전쟁 관련 발표자	홍문기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장한린(張漢林)	쇼우두(首都)사범대학 역사학원
2	러일전쟁 관련 발표자	김소영	국립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잔샤오바이(湛曉白)	베이징사범대학 역사학원
3	3·1운동 및 5·4운동 관련 발표자	홍종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린후이펑(林輝鋒)	베이징사범대학 역사학원
4	토론	홍영미, 류준상	동북아역사재단

‘공동의 역사’가 분쟁의 불씨가 아닌  
진정한 ‘공유되는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관점과  
중대한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이분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전문연구자들에게는 나름 유익하겠지만, 그 외 분들에게는 너무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 새로운 연구 방향을 얻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청일전쟁의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청일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사람들이 경험한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포착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를 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관한 공동발표 자리인 이상, 뭔가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 및 역사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청일전쟁에 관한 한 한국은 ‘공동’의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쇼우두사범대학 장한린 교수는 중국 교과서에서 갑오전쟁<sup>1</sup>을 설명할 때 주로 ‘중국은 왜 패배했는가’라는 선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중국 군대 중심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중국인의 고난과 저항, 성장을 강조하는 중국 중심적 시각이 지배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공동의 역사’가 분쟁의 불씨가 아닌 진정한 ‘공유되는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관점과 중대한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1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이라는 단어 대신 ‘갑오전쟁’이라고 부른다.



포럼 발표 장면

로 응답하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와는 달리, 주최 측의 취지에 보다 충실한 발표였다.

발표가 끝난 뒤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나는 “전쟁 중 피해를 당한 일반인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이 양국이 공유해야 할 역사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장한린 교수는 동의를 표하면서,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한국에서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사건으로 뤼순대도살(旅順大屠殺)을 언급했다. 이는 일본에서는 뤼순학살사건(旅順虐殺事件)으로 불리며, 1894년 11월 일본군이 뤼순을 공격할 때 청군 패잔병과 뤼순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이때까지 뤼순대도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대신 청일전쟁 이후 대만을 점령한 일본군과 대만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었다. 이번에 뤼순대도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청일전쟁 관련 역사 교과서 내용의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국 학계의 변화를 실감하다

장한린 교수와 잔샤오바이 교수는 각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관련 역사 교과서에 대해 발표했다. 두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근현대사에 관한 중국 역사교육의 방향을 알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던 중국 학계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뒷풀이 자리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장한린 교수는 75년생, 잔샤오바이 교수는 80년생으로 77년생인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그런데 이들은 서구 학계 및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에 능통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역사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장한린 교수는 ‘공통의 역사’를 넘어 ‘공유하는 역사’ 개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를 여러 차례 인용했다. 레비나스는 동유럽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유대계 철학자로, ‘거울로서의 타자’, ‘희망으로서의 타

중국의 학생들이 러일전쟁을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를 주장했다. 장한린 교수는 레비나스의 사상에 입각해 타자는 단순히 자아를 비추는 도구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절대적 타자성’과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보면서, 주체는 이러한 타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동아시아가 왜 공유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그 당위를 제시한 것이다. 레비나스를 가장 열렬히 수용한 학계가 유대교 및 기독교 등 종교 계열이었음을 감안하면, 중국 학계에서 이렇게 레비나스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뒷풀이 자리에서 장한린 교수에게 중국 학계에서 어떻게 레비나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서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잔샤오바이 교수는 요코테 신지(横手慎二)의 ‘안보 딜레마’ 이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러일전쟁 조선 기원론’, 이리에 아키라(入江昭)의 ‘일본 근대화 분수령으로서의 러일전쟁’ 주장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러일전쟁을 중·일·러 3국 중심의 폐쇄적인 ‘피해-저항’ 서사로 단순화하여 전쟁 발발의 복합적인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신 학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중국의 학생들이 러일전쟁을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주의가 중국 사회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알기에, 이러한 발표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못했다. 민족사, 국가사가 가진 가치와 효용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역사를 함께 서술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중국 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 나가며

나는 중국 학계를 잘 몰랐다. 그래서 내 연구에서 인용했던 외국 선행 연구들도 대부분 일본 혹은 서구 학계의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중국이 당사자로 관여했던 청일전쟁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인용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학자와의 토론을 거치며 청일전쟁에서 한국사와 중국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얻은 것, 나아가 민족사·국가사에 제약되지 않는 역사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이번에 얻은 인연을 돈독히 이어나가 중국 학계와 계속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준 재단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학계와 사회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주체성이라는 난제와 비판성의 행방

## 제2차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

**이경미(李慶美, Lee, Kyung-mi)**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현대 한일관계를 사상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재단에서는 관동대지진 학살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역사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시선이 교차하는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린다

2025년 7월 21일,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 국제학술회의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사회·역사·정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차세대 연구자 중심의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내 한국 관련 연구자를 초청하여 국내 연구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한 새로운 기획이었다. ‘외부’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자칫 ‘폭력’을 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일의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현장은 ‘학술’이 갖는 매개적 힘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3월 13일, 제2차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경험, 지역, 표상〉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준비단계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회의 참가자를 차세대부터 중견세대까지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도였다. 둘째로, 회의 구성을 분야별에서 주제별로 재구성했다. 이는 회의의 성격을 더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분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 방식을 지향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조정을 반영하여, 셋째로 회의명을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으로 개칭했다. 포럼의 이름에 담긴 ‘미래세대’라는 표현에는, 세대와 분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한일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대를 담아냈다.

### 미래세대의 도전: 경험, 지역, 표상

이번 포럼의 부제인 ‘경험, 지역, 표상’은 각 세션의 주제를 압축하는 동시에, 한일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한 단층이기도 했다. 그 단층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 어떤 공통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그 궁금함이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제1부 ‘증언과 일기로 보는 식민지 경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그려낸 일기와 비일상적인 피해에 대한 증언이 함께 놓였을 때 식민지 경험이 어떻게 논의될

제2차 한일 미래세대 연구자 포럼

#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 경험, 지역, 표상

## 日本からみた韓日関係: 経験, 地域, 表象

2026. 3. 13. (Fri) 10:00~18:00, 동북아역사재단(대회일실, 11F)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이상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00-10:10 개회사: 박지형(朴枝暻)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10-10:2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제1부 증언과 일기로 보는 식민지 경험 / 証言と日記でみる植民地経験

사회: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10:20-10:50 발표1 1930년 조선인 소년의 눈에 비친 학교·서울·일본  
1930年朝鮮人少年の目に映った学校・京城・日本  
- 하라 도모히로(데이쿄대학) / 原智弘(帝京大)

10:50-11:20 발표2 식민지조선의 여성들이 꿈꾼 '공장에서 일한다': 방적공장 여공과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다시 연결하는 시도  
植民地朝鮮女性たちが夢見た「工場で働く」: 紡績女工と日本軍「慰安婦」の証言とつながり直す試み  
- 사카모토 치즈코(리스메이칸대학) / 坂本知壽子(立命館大)

11:20-12:20 토론 기유정(서울대), 이아리(동북아역사재단)

12:20-13:30 휴식

제2부 재한과 재일, 교차하는 지역사 / 在韓と在日, 交差する地域史

사회: 서중진(동북아역사재단)

13:30-14:00 발표3 '북선 루트'를 둘러싼 토지 투기와 함경북도의 사회 변용  
「北鮮ルート」をめぐる土地投機と咸鏡北道の社会変容  
- 가토 게이키(히토쓰바시대학) / 加藤圭主(一橋大)

14:00-14:30 발표4 재일 한국인의 가족사: Ego-document와 구술 자료에 의한 접근  
在日韓国人の家族史: Ego・ドキュメントと口述資料による接近  
- 이시카와 료타(리스메이칸대학) / 石川亮太(立命館大)

14:30-15:30 토론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박준형(서울시립대)

15:30-15:40 휴식

제3부 해방과 전후, 한일의 기억을 표상하기 / 解放と戦後, 韓日の記憶表象

사회: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15:40-16:10 발표5 길들여지는 저항의 기억: 1987년 6월 항쟁의 기억을 둘러싼 정치 담론  
馴れ慣らされる抵抗の記憶: 1987年6月抗争の記憶をめぐる政治言説  
- 이오키 요시유키(뫼코대학) / 青木義幸(獨協大)

16:10-16:40 발표6 '전쟁 체험'의 변용과 전후 일본: '단절'의 역설과 세대 간 투쟁  
「戦争体験」の変容と戦後日本: 「断絶」の逆説と世代間闘争  
- 후쿠마 요시아키(교토대학) / 福間良明(京都大)

16:40-17:40 토론 이영진(강원대), 서동주(서울대)

폐회

이번 포럼의 부제인 ‘경험, 지역, 표상’은  
각 세션의 주제를 압축하는 동시에,  
한일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한 단층이기도 했다.  
그 단층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 어떤 공통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그 궁금함이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수 있을지 탐색한 세션이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하라 도모히로(데이쿄대학)<sup>1</sup>는 「1930년 조선인 소년의 눈에 비친 학교·서울·일본」을 주제로, 경성공립제일고 등보통학교를 다니던 Y군의 일기를 분석했다. 당시 지리적(북촌/남촌), 언어적(조선어/일본어), 시간적(구력/신력)으로 이중도시였던 서울에서 Y군은 그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한편, 왜(倭)라는 표현이나 3·1절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을 통해 식민지의 제약 속에서 삶을 이어간 심성을 드러냈다. 이에 기유정(서울대학교)은 Y군의 일기를 한국의 최근 연구와 당시의 사회계층적 맥락 속에 재위치시킬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이중성이나 경계성에 대한 묘사를 넘어 주체성(subjectivity) 형성의 식민지적 요인을 밝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두 번째로 사카모토 치즈코(리쓰메이칸대학)<sup>2</sup>는 「식민지조선의 여성들이 꿈꾼 ‘공장에서 일한다’: 방적공장 여공과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을 다시 연결하는 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카모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속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주목하여, 여공과 ‘위안부’의 경험이 산업화라는 구조 위에서 이어지는 양상을 추적했다. 특히 양자의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행위성(agency)’을 조명한 사카모토의 시도는 피해자의 삶을 전쟁이라는 특정 시기에서 근대라는 시공간에 재위치시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에 이아리(동북아역사재단)는 사

1 原智弘, 『一九三〇朝鮮人生徒の日記: 十四歳, 京城府での一年』, 帝京大学出版会, 2025.

2 坂本知壽子, 「植民地朝鮮女性がいた風景: 日本軍‘慰安婦’になった女性と, ならなかった女性」, 『朝鮮史研究会会報』, 234号, 2024年3月.



첫 번째 발표자인 하라 도모히로



제1세션 토론 장면

카모토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여성들의 행위성을 강조할 때 선택의 자발성이 아닌 구조적 취약성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대규모 섬유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여공이 부족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원거리 집단 모집 방식이 ‘위안부’ 동원 피해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음을 지적했다.

제2부 ‘재한과 재일, 교차하는 지역사’는 로컬 차원의 트랜스내셔널한 접근이 상호 교차성을 지닐 때 어떤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을지 탐색한 세션이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가토 게이키(히토쓰바시대학)<sup>3</sup>는 「‘북선 루트’를 둘러싼 토지 투기와 함경북도의 사회 변용」을 주제로, 만주사변 이후 대륙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선 루트’로 부상한 함경북도 나진·웅기 일대에서 벌어진 토지 투기의 양상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차원의 권력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자본 유입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낮은 가격에 토지를 잃은 반면 일본인 지주·상인과 극소수의 조선인 유력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이들 특권적 계층은 도회나 읍회에 진출하여 조선총독부에 협력하는 지역 유력자로 성장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응한 1870년대 이래 일본의 함경북도 진출 구상이 나진·웅기 토지 투기의 배경으로서 보충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니가타(新潟) 지역과의 경제적 연동관계를 과제로 제시했다.

네 번째로 이시카와 료타(리쓰메이칸대학)<sup>4</sup>는 「재일 한국인의 가족사: Ego-document와 구술 자료에 의한 접근」을 주제로, 식민지시기 한반도에서 오사카로 건너간 재일한국인 가족(임학주·이순점 부부 및 자녀들)의 생애사를 발표했다. 지연·혈연 없이 도일한 전라북도 출신의 아버지가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평안남

3 加藤圭木, 『植民地期朝鮮の地域変容: 日本の大陸進出と咸鏡北道』, 吉川弘文館, 2017.

4 石川亮太, 『ある在日韓国人クリスチャン家庭の百年: 大阪・林家の生活史』, かんよう出版, 2025.

도 목사 집안 출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과정, 교회 중심의 가족 공동체에서 자란 자녀들이 취업 차별이나 일상적 배제(microaggression)에 직면하면서 캐나다 이민, 한국 민주화운동 등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이에 박준형(서울시립대학교)은 화교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재일한국인 가족사 연구로 이어진 이시카와의 연구 지형을 재검토하는 한편, 재일조선인 연구사 속에서 종교와 재일한국인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발표의 의의를 평가했다.

제3부 ‘해방과 전후, 한일의 기억을 표상하기’는 한일 양국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가를 민주화운동과 전쟁 체험에 대한 집단기억의 구성 방식을 통해 검토한 세션이었다. 다섯 번째 발표를 맡은 아오키 요시유키(도쿄대학)<sup>5</sup>는 「길들여지는 저항의 기억: 1987년 6월 항쟁의 기억을 둘러싼 정치 담론」을 주제로, 6월 항쟁이 공적 기억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교란적인 힘이 통제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보수 정권이 6월 항쟁을 비가시화하고 6·29선언으로 환원한 반면, 진보 정권은 항쟁을 적극 승인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폭력·평화의 서사가 특권화되면서 항쟁의 급진적 측면은 망각되었다. 이에 이영진(강원대학교)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 학계의 관심 저하를 언급하면서 아오키의 연구를 평가했지만, 그것이 한국 학계의 비판적 연구와 차별화된 포지셔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화된 기억 속에서 소거된 폭력의 흔적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 Didi-Huberman)의 ‘반딧불의 잔존’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후쿠마 요시아키(교토대학)<sup>6</sup>는 「‘전쟁 체험’의 변용과 전후 일본: 단

5 青木義幸, 「死者の記憶と韓国民主化運動」, 『韓国学ハンマダン』, 岩波書店, 2022.

6 후쿠마 요시아키, 『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 ‘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 소명, 2024.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찍은 단체사진

절의 역설과 세대 간 투쟁」을 주제로, 스스로 일으킨 전쟁의 결과를 둘러싸고 전후 일본에서 어떤 기억 투쟁이 있었는지를 세대 간 담론을 통해 추적했다. 특히 1960년대 전중파의 ‘피해자 의식’을 비판하는 형태로 전개된 전후파와의 단절은, 1980년대 ‘가해와 현창(顯彰)’의 이항대립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단절은 탈냉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잊혀진 채로 계승되고 있다. 후쿠마는 전후 80년을 맞이하여 ‘기억의 계승’이 회자된 상황을 상기시키며, ‘단절의 계승’ 속에서 사라진 전중파의 논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서동주(서울대학교)는 후쿠마가 제시한 담론 구도를 대중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토론을 전개했다. 그는 1954년 전쟁 체험의 기억을 자극하여 흥행에 성공한 <고질라>가 1960년대 이후 전쟁과의 관련성을 상실해 간 변화에 주목하여, 미국이라는 냉전 우산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발성에 삼켜지지 않는 행위성, 양가적 공간에서  
성립되는 주체성이란 아마도 이 질문에 응답할 때  
비로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이탈해 간 대중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다각적 구도로 볼 때 전종파에 대한 전후파의 강한 비판에도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새로운 측면이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뒷북 치는 난제들: 주체성과 비판성

제1차 회의에서는 교차하는 시선이 대화의 장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이번 제2차 포럼에서 확인한 것은 그 대화의 깊이와 폭이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세 세션에 걸쳐 펼쳐진 발표와 토론을 되짚어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었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논평을 넘어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더 넓은 가능성으로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냈다.

가령 기유정은 이중·경계·혼종이라는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체성의 문제를 끄집어냈으며, 이아리는 구조와 주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난 행위성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시각을 제시했다. 둘의 토론에서 공통된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라 하겠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일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한다. 하지만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그러한 인식 자체가 근대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혹은 그 너머 세계의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발성에 삼켜지지 않는 행위성, 양가적 공간에서 성립되는 주체성이란 아마도 이 질문에 응답할 때 비로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변용을 다룬 가토의 문제의식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 속에서 한국 사회의 독자적 과정을 그려내려는 시도를 내포했기 때문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지나간 과거'에서  
'미래의 잣대'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다. 그것은 어쩌면  
포스트콜로니얼 비평이 놓쳐버린 '비판성'을 되찾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행방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이 난제를 푸는 과정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다. 이 점에서 가토의 접근은 제1차 회의에서 민중의 반응을 중시한 이토 슌스케의 연구 시각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주체성·행위성을 묻는 토론이 고심을 거듭해야 했던 것처럼, '독자성'을 재현하는 방식 또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 실마리는 박한민이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 긴 시야에 놓였을 때 포착할 수도 있고, 또 박준형이 짚어냈듯이 사회경제사에서 생애사로 나아가간 이시카와의 연구 지형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침략에서 생애까지 아우른 중층적 '월경'의 역사(transnational history) 속에서도 결국 질문은 되풀이된다. 우리는 내셔널한 관계를 허물어뜨린 그곳에 과연 어떠한 '역사'를 상정할 수 있을까.

아오키와 후쿠마, 그리고 이들에게 제기된 토론은 이 점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동주가 전후파의 고립된 비판성으로 부각시킨 1960년대, 후쿠마가 '단절의 계승' 속에서 구출하려는 전중파의 논점은, 아오키가 제도화의 저편에서 재기를 촉구하는 가능성, 이영진이 소환한 '반딧불의 잔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지나간 과거'에서 '미래의 잣대'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다. 그것은 어쩌면 포스트콜로니얼 비평이 놓쳐버린 '비판성'을 되찾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행방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이 난제를 푸는 과정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7호 2026 여름

발행일 2026년 6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박정애  
편집위원 김나영, 배현준, 손장훈, 이주연, 전영욱, 조호연, 함예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ISSN 2950-9696